

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1월8일(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안
38.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39.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별법안
40.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4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4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3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3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3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3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	19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19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19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19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19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19
11. 주택도시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2
1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3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6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7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30
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30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30
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36
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36
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36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37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37
2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37
2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37
2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37

2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37
2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38
3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9
3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39
3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39
3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41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43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43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43
40.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46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48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48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48
37.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52
38.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52
39.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별법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52
4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59
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0
4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60
4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63
4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63
4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63
4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중섭 의원 대표발의)	63
4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63
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78

(10시36분 개의)

○소위원장 민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경환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병완 의원안입니다.

의원님께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자는 내용인데 이 안은 지금 장병완 의원님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논의결과를 보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오늘은 상정만 하고 다음에 그 논의결과에 따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된 내용은 여기에 저희가 설명해 났는데요. 3쪽에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5쪽에 국민연금공단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8쪽에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사업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법 심사 과정을 보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쪽입니다.

이연주 의원안입니다.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철거 등의 조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의 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지만 정부는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모두 임의규정으로 할 경우 난개발 및 특별관리지역 개발 지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건축법이나 개발제한구역법 등 유사 입법례처럼 철거 등 조치는 임의규정으로 하되 명령 미이행 시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강행규정으로 하여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기타 조문과 관련해서는 일부 체계·자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조정식 의원안입니다.

의원님께서서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지만 정부가 입주자의 자격·선정방법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수정의견으로 법률에는 우선공급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 및 자격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되 주거기본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서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도 우선공급대상으로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민홍철 의원님 안입니다.

10년 임대주택분양 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변경하자는 내용인데 검토 의견으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지만 다만 주택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는 사업위험 증가 등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공급 위축 및 기존 법령 및 계약에 대한 사업자 신뢰보호 등의 측면에서 개정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양전환제도의 도입취지 및 사업자 신뢰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체토론에서 위원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김경환 차관님 정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2쪽, 장병완 의원님 안은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9쪽, 이연주 의원님 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 개정안을 수정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15쪽, 조정식 의원님 안은 역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고 따라서 개정안을 수정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18쪽, 민홍철 의원님 안은 정부는 개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1번 장병완 의원님 법안이요. 국민연금법이 먼저 개정되기 전에는 논의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먼저 선언적으로 해 놓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논의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법이 된다면 두 법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선후는?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선후는 어찌 보면 국민연금법이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원욱 위원 여기에서 먼저 법을 개정해 놓으면 그쪽에서도 개정 안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연금의 재원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원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선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의 10%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차관님, 이런 상태에서 실제 재원 마련을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렇지요? 그 원칙적인, 원론적인 수준은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재원이 중요한 제약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원욱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먼저 공공임대주택법을 개정해 놓고 그리고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선후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것도 동의하시고 재원이 없다 이것도 동의하시는데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 국토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재원과 함께 택지 확보나 또 주변의 수용성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일단 소관 부처가 복지부와 기재부가 되겠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법은 국민연금에 있는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자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재원의 사용에 대한 정책이 먼저 결정이 난 후에 그다음에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이 논의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위원 아니 차관님, 저는 예를 들어 먼저 보건복지위에서 원론적으로 논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차관님께서 조금 아까 ‘이것은 불수용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요, 지금 상태에서……

○이원욱 위원 불수용이라고 하시니까……

공공임대주택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하고 이런 데 그러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이러한 재원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런

반응이 있으셔야지 원론적인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한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곳이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 돈이 공공임대주택기금으로 전용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공임대정책을 만들고 있는 국토부에서 그런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 말씀 일리가 있으십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도 정부의 한 부처이고 이 문제는 정부 전체 입장에서 또 국민연금이라는 게 온 국민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그 안에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 전체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토부 입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재원이 더 생기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부처의 입장에서 추가재원을 갖느냐 안 갖느냐만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정부 전체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원욱 위원 여기 청와대 아니고요, 국토부차관님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욱 위원 공공임대주택을 담당하시는 국토부차관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는 정부의 정부직 공무원이고 국토부에서 주거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민적인, 국가적인 중요성을 볼 때 기금의 안정성이나 수익성 같은 것을 감안하는 것은 저희가 주관 부처가 아니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입장에서 재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는 건데 지금……

○이원욱 위원 그러면 어떤 재원을 발굴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

로 이 상황이……

○이원욱 위원 지금 여기에서 다 말씀하시기에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 그 재원 확충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따 오후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다 좀 나누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글썄, 그것은 확충을 하는 것은 확충하는 건데요.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재원 확충 계획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 확충 계획이 국민연금을 활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정책의 목표의 하나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계속해서 확충하려는 노력은 이것과 관계없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이 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마련하지 않고는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욱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 너무 길어져 가지고 죄송한데 금방 끝내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고.

○소위원장 민홍철 예, 마무리……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그리고 잘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10%도 안 되는 이런, OECD 평균 1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확대돼야 된다고 하는 현실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OECD가 10%를 넘는 것은 아니고요, 통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6% 정도 됩니다.

○이원욱 위원 오케이. OECD 평균 10%……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최근에 OECD 통계가 8%로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되셨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은 이 사안과 관계없이 계속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원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 마련 계획

오후 회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소위원장 민홍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한 5분 이내에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따 보충질의하실 때는 시간을 별도로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순서는 또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걸로.

박덕흠 위원님 먼저 신청을 하셨는데……

○박덕흠 위원 15쪽, 민홍철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인데요.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요, 순서대로 하실까요?

○박덕흠 위원 그러면 아예 순서대로 하시든가.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시지요.

○박덕흠 위원 1쪽 했으니까 2번으로 넘어가고……

○소위원장 민홍철 의안 순서대로 하시는 게, 오히려 그게 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김현아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현아 위원 저도 1안이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이원욱 위원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전현희 위원님 하시고.

○김현아 위원 저희가 논의를 좁혀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연금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법안을 보시면 청년들한테 주고, 청년 1인 가구한테 주는 이렇게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 1인이 과연 공공의 어떤 지원대상이나, 특히 연금을 깨서까지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냐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분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쩌나 하면 저희가 사회적 약자라는 걸 규정하고 그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줘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 중에서 지금 여기 법안에 올려놓은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라는 걸 규정할 수 있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그냥 청년 아이들의 주거 문제를 저희가 대변하는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규정하고 거기에서 이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보는 논의도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국민연금을 쓰겠다

고 하는 것 중의 상당 부분을 보면 해외 사례가 이렇게 국민연금을 쓰는 사례는 없고, 제가 지난 여름에 싱가포르에 가서 보니까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있는데 그 연금을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입한 금액에서 그걸 의료 비용으로 쓰느냐 주거 지원으로 쓰느냐의 선택을 해서 가져오는 거지 이렇게 남이나 다음 세대가 받아야 되는 또는 적립한 돈을 특정 세대한테 몰아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원 조달의 문제가 필요하지만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오후에 당장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논의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공공임대에 대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토부한테 용역을 해 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거기에 아울러서 국민연금공단이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한번 주고 나면 이 부서는 계속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고요, 나중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쓰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 주거라는 것이 취약계층 중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갖느냐라는 것도 조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전현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취지는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는 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8대 국회 때 4년간 보건복지위를 하면서 국민연금에 관해서 국정감사나 이런 걸 많이 살펴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수입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이고 공공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투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익을, 국가가 지나치게 영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고 국민연금의 목적도 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냐 하면 수익을 내기 위한 주식 투자라든지 해외의 그런 어떤 프로젝트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또 까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익이나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연금은 그 자체의 원금을 보존하면서도 공공적인 목적에 사용을 하는 게 국민연금의 가장 우선된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손해가 난다든지 연금을 까먹어서 나중에 우리 후세대에 물려줄 연금의 재원이 없어진다는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원칙적인 취지는 저는 공공성이고 안정성이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하고 있는 수익을 좇아서 투기나 투자 이런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저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주택이 과연 국민연금의 사업이 되는 데 부족함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공공주택에 투자해서 이게 원금이라든지 수익 안정성,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연금의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의 목적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 사업은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이랑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위랑 연금공단이라랑 국가정책 전반에서 이게 조율이 돼야 한다 이 측면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국민연금의 공공기금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해 볼 만한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원금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또 약간의 수익성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공주택에 연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오늘 당장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국토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연구용역이나 세미나,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필요성과 또 연금의 공공성·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도출해서 그것을 복지위나 또 기재위나 이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이런 입장을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감사합니다.

다음, 이 1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희 위원 차관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국민연금의 운용은 그 자체로서의 의사결정 체계가 있고 운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들이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공임대주택의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아까 이원욱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계획 5년짜리 계획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더 지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 좀 더 철저히 담고 또 추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鄭宗燮 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김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원 말고 나머지 부분들 그건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

국가정책에서 정책에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 충분한, 그건 정부가 재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별문제인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없는 데서 필요성은 인정되니까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될 것인가, 큰돈이 결국은 국민연금이니까 그것을 손대 보자는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선은 재원 조달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선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다 이게 아니고 그것은 병렬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성립이 안 되면 이것은 시행할 수 없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선후 문제로 보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재원 조달에 대해서 용역에 맡겨서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만약에 연계시키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그걸 분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손댄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만약에 이것을 초기 논의부터 모르고 이것을 이리로 연결시켰다 했을 때 나중에 국

민들의 저항이라는 것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 방식에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해서 또 검토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연결시키는 것은 분리해서 용역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용역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걸 공론화를 시켜 봐야지 이것을 정부 내에서 추진할 때 적당히 공론화시키지 않고 나중에 꺼내 가지고 이걸 한다 그러면 국민적 저항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 점을 상당히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또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이원욱 위원 마무리 말씀 할게요.

○소위원장 민홍철 마무리하시지요.

○이원욱 위원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민연금공단이 주택사업자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들은 사실은 수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임대주택의 주관부서로서 국토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전향적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 주셔야지 보건복지부장관처럼 말씀하시면 여기서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이 있어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하지요, 공청회 등등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필요한 절차와 국민연금의 투입 여부 또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협의 절차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1안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다음 2안 이연주 의원님 발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정부가 수정의견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수정의견입니까?

어떤 내용들,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러니까 지금 철

거와 이행강제금 부과 두 가지가 있는데 2개를 다 임의조항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건축법이나 개발제한구역법 입법례를 보면 철거 등의 조치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강행규정으로 하면 다른 입법과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2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이걸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주거기본법 입법례를 참고해서 거기에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이 법에.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걸로 해서 정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아까 이언주 의원이, 뒤에 조정식 의원님하고 청년 1인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어야 될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그렇게 안 박았습니다. 청년층……

○김현아 위원 왜냐하면 각각의 계층에 대해서 또 자산 검증이 다 필요하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예.

○이원욱 위원 김현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3안 그런 의견으로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4안.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18페이지.

○소위원장 민홍철 4안 법률안에 대해서 아까, 수용 곤란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이 문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법안입니다. 그때 정부의 입장은 원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정해진 계약관계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관계를 사후에 변경할 경우에 직접적으로는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도 있고 또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될 경우에 민간건설 10년 임대주택사업은 일단 신규는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 택

지를 분양받아서 시행하는 약 3, 4만 호 물량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공공부문인 LH에서는 계속 리츠방식으로 10년 임대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여러 시뮬레이션해 봤습니다마는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LH가 아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서 재정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추가될 경우에 더욱이 수익성 저하로 인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후적으로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또한 작년에도 논의과정에서 특히 인기지역에서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가격조건을 가지고 변경을 하게 될 경우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겨서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저는 위원으로서보다는 공공임대 10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그때 제가 연구원에 있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5년 임대가 보편화됐다가 중간에 분양전환이 되고 이게 임대나 분양이나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10년 임대로 임대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 임대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국토부한테 하나 궁금한 게요. 만약에 10년 공공임대에 살다가 제가 분양전환을 안 받으면 계속 살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김현아 위원 저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자는 거예요. 원래 공공임대는 장기적으로 최소 10년을 보장받고 그 이후에도 내가 임대로 살고 싶으면 임대로 살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경기가 요동칠 때마다 분양전환 요구가 있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하고 사실 부딪히게 됩니다.

저희 의원실로도 이 민원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사인을 안 할 경우 단체적 행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오는데, 여기 사례를 보면 지금 사는 것에 비해서 분양전환가격이 너무 높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10년만 살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의 대안은 그냥 여기서 임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임대로 조정할 때 조금 이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안 가게 조치를 해 준다면 저는 공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지금 5년 임대하고 같이 산정방법을 한다고 하면 저희 임대주택 전체의 틀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10년 이후에도 계속 산다라고 하면 원래 10년 임대의 취지를 살리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아주 최악의 경우인데 저희가 10년 임대를 만들 때는 분양전환의 가능성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만들 때 '10년 후에 주택가격이 오르겠어?' 사실 그 부분이 이렇게 문제될 거라고 보지 않았는데 중간에 가격이 올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뒤가 됐는데 주택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뭐냐? 감정평가금액보다 건설원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지요.

10년 임대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사업자들이 그래서 안 들어오고 정부가 여러 가지 보완절차를 통해서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지금 또 흔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가서 분양 도래하는 것마다 또 규칙을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안으로 바꾸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체제를 흐트러뜨리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전세가가 오르고 주변의 집값이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세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국토부한테 검토를 하게끔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제 안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저도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면 동일 평수 시세 같은 경우에 관교 봇들마을 같은 경우에는 8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으로 이렇게 해 보면 분양전

환가격이 3억 1000만 원 이렇게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는 또 개정안으로 보면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돼서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게 10년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기 때문에 5년으로 했을 경우에 정부의 뉴스테이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급입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고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좀 더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정부가 10년 임대 분양전환주택사업을 시작할 때에 제대로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정책 방향을 세우고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임대로 그냥 가면 어떨까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공공임대로 한다고 하고 주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모집을 했으면 임대로 가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주택실장님, 이분들 들어올 때 다 주택 부금통장 털고 들어오신 분들이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전현희 위원 이분들은 분양 생각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임대' 이랬으면 이 문제가 발생을 안 했지요. 이것은 평생 모은 자기들의 주택부금통장을 털어서 오셨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걸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서 사실상 분양을 못 받고 살던 아파트에서 자기들 표현에 의하면 쫓겨나는, 물론 임대로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정부가 보호해 줘야 할 기득권, 권리 이 부분을 외면하는 현상이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형태든지 거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격이 맞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없다면 정부도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하면서 '안된다. 돈 있으면 분양받고 아니면 나가라'식의 이런 행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대 때 저는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도 분명히 문제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에 와서도 정부는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 또한 무책임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격조건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라든지 소급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면 저는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저도 고민하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국토부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국토부 정책의 책임을, 부실입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입주민들의 권리에 관해서 그걸 어느 정도 충족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저는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취지와 도입 당시의 설계를 보면 사실 5년 임대와 10년 임대는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사업은 장기를 보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면 리스크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이 분명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달라졌다고 해서 추후에 규칙을 바꾸게 되면 앞으로 이런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정부의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민간에 의한 10년 임대주택사업은 지금 분양돼 있는 택지를 끝으로 이제 안 하게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주체인 LH는 계속해서 리츠를 통해 이런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환경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료의 상승폭은 물론 법으로 5% 이하로 제한이 돼 있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입장에서선 결과적으로 ‘그때 집을 분양받을 걸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사후적인 얘기고 당시에 계약이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입주자도 선택을 한 것이고 사업자는 그러한 계약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100%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글썄요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또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더 의논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 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덕흠 위원 지금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5%면 서민들은 엄청 높은 저기인데 먼것번에 정동영 위원님이, 부영에서 임대주택 하잖아요. 거의 매년 5%씩 받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면 부담이 엄청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LH와 같은 공공사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앞으로는 폐지가 되지만 부영과 같은 민간건설사업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임대료 상승폭과 관련해서는 LH의 경우에는 법정 상한 5%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률을 적용하고 있고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국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까마는 상한까지 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감 때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관련 지자체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임대료 상승률이 이루어지는지, 법규정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물가상승률 같은 것들을 고려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너무 과도하게 상승폭을 법정 상한까지 가져가는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제가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저

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김현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사업 목적이라든지 그 시작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임차를 해서 계속 사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법에 분명히 10년차에 우선분양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임대 사업자들이 10년이 딱 되면 우선분양으로 들어가요. 임차인들이 더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지자체에다가 승인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살기 싫으면 나가라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올해부터 분양전환으로 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전국에 한 12만 호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도래하는 문제들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또 현행법 시행규칙에 별표로 되어 있는 규정 자체에도 분명히 각 단지별로, 각 지역별로, 각 사업자별로 분양전환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이 ‘임대사업자들이 분양전환을 함에 있어서 감정가격을 최고한도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나 단지의 평형이나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되어 줘야 되는데 임대사업자들이 지자체에다가 그냥 감정가격 중 최고가격으로만 분양전환가격을 승인 신청하는 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로 간에 협의해서 그 이하의 가격에서 어느 임의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정부에서도 제가 수차례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권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임대사업자들이 최고가격으로만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물론 아까 사업의 취지라든지 10년 임대아파트의 도입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10년과 5년의 가격을 산정하는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제는 LH만 이거를 시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새롭게 다시 설계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익의 분점을 떠나서 현재 현행법 규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각 지역별로, 각 단지별로 합리적인 선에서 분양전환가격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감정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신청하게 되어 있고 신청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이런 제도가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어 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입장은 아까 그 말씀 그대로이십니까?

○전현희 위원 제가 조금 더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부연해 주시지요.

○전현희 위원 지금 이 법안을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게 소급효 문제라든지 정책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일 거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맹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나 소급효 이런 문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정부가 지키려는 정책에 대한 신뢰, 정책에 대한 영속성이나 이런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실은 이게 공적자금이 투자돼서 공공주택으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공적자금이 투자된 그 아파트가 결국은 정부가 지키려는 신뢰로 갔을 때 누구를 위하는 게 되느냐, 사업자를 위한 게 됩니다. 민간도 있고 LH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뭐 꼭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공적자금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지요. 그것이 투자돼서 결과적으로는 민간기업자 아니면 정부가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니까? 우리 서민들에게 내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져서 이러한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주택부금통장을 털어서 아파트에 입주한 서민들이 이 정책의 효과를 누리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려는 대로 간다면 이것은 민간사업자나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수익이나 혜택을 가져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앞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10년 분양된 몇만 호 외에는 앞으로 추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

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특별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법률적인 견지에서 봐도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입주한 서민들의 기득권이라든지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을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것을 잃게 만든 것은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큰 책임소지가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이나 판교 부근에 아파트를 지으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것을 정부는 예측해야지요. 일반 민간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측은 하겠지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분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정부의 과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여기에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현아 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 위원님하고 민홍철 위원님하고 입장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전 위원님의 입장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19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지역마다 현행 분양전환가격하고 건설원가하고 비교했을 때 개발이익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 주면 그 단지들 간에 또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년 임대주택은 원래 10년 동안 살고 나중에 분양전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원래 분양전환을 우선으로 한 건 아닌데 민홍철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정부가 분명히……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

○김현아 위원 예, 사업자.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10년 임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고민을 했는데 10년 뒤의 주택시장에 대해서 맞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10년을 본다는 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했고, 잘 아시겠지만 판교도 처음에 10년 임대 입주자 모집해서 텅텅 비었었어요. 채우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시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논할 수는 없는데……

제가 공감하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지자체에서 분양전환가격에 대해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민홍철 위원님대로 법 규정에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당장 이 법안을 통과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국토부가 검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 지금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습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원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공택지에서는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법에 집어넣든지 분양전환 할 때 공공의 협의체가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볼 절차를 만든다면 지금보다 조금 줄일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런 절차적인 것에서 저희가 안 되는 것을 뭔가 국토부가 방안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동영 위원 결국 이걸 국토부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19페이지의 표를 보면 이대로 현행 분양전환가격으로 하면 경기도의 A·B·C단지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거의 50%의 차익을 거두게 되는데 과연 사업자에게 이렇게 다 가는 것이 정의냐 아니면 입주자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국토부가 ‘국토서민부’라는 철학을 갖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5년이든 10년이든 임대주택에 입주한 거주자들이 우리 사회의 중상층이 아니라 중하층 또는 중산층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지 사업자에 대한 신뢰, 뭐 여러 가지 명분과 이런 걸 동원할 수 있겠지만 나는 결국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최근의 국정 혼란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데 국토부가 좀 더 주거 약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 쪽에 있는 그쪽 편을,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에서 사업자 편보다는 입주자 편에 서겠다는 철학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나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확연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
기의 국토부 입장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시지
요.

○鄭宗燮 위원 이 문제를 저렇게 보면 안 됩니
까? 어차피 이게 서민 정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민 정책인데 사업자가 이거를 해 가지고 수익
을 많이 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
서 사업자가 적자를 보고 계속 나갈 수도 없으니
까, 그러면 이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일정 이상의 수익은 못 가져가게 하는 방식이지
요.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죽 할 것이 아니
라 개별적으로 봐 가지고 좀 플렉서블(flexible)하
게 그렇게 디자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제가 말씀드리기
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정동영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국토부가
서민 주거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태생적으로 우리나라
에는 여러 해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하고 공공자금만으로는 그러한 공공임
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
문에 민간의 힘을 빌리고 공공의 지원을 더해서
이 사업을 되게 해서 5년,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년, 10년 후에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름
대로 리스크를 계산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사업 주체가 있어야 이 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
니까? 그래서 출발한 것이고.

전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토부가
좀 더 예측 능력이 뛰어나서 10년 후에 벌어질
상황을 다 알고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그
것은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지금도 마
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사후적으로 결과만을 보고
이걸 누가 가져가는 것이 옳느냐 그런 판단은 정
무적으로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정책이 만들어지고 사업을 되게 할 때 정했던 룰
을 이제 와서 변경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
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을 요

하는 많은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가지
만 나중에 결과를 보고 다시 바꿀 수 있다’ 이러
게 하면 민간이 리스크를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고 또 앞
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H가 앞으로 리츠를 통해
서 이런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사후적으로
배분의 문제를 다시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저희가 서민의 편이 아니라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
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정동영 위원 차관 말씀에 모순이 있어요. 말
하자면 태생적으로 다르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다릅니까?

기본적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프로그램이 탄생한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자본과
공공의 지원을 합해서 이런 사업이 됐으면 민간
이 위험을 감수한, 리스크 테이크한 부분에 대해
서는 인정하더라도 공공 지원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을 사업자 몫으로 넘겨줄 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정종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온전하게 시장에서 발생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거품 정책에서 발생한 그 몫을 사업자에게 다 주
는 것은 10년 임대주택이 태생적으로 다르다라는
그 말씀과 배치하는 거예요.

○김현아 위원 저도 의견을 드릴게요.

○소위원장 민홍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정동영 위원님 기억하실 것 같은
데 이거 참여정부 때 만든 거고요. 그때 취지는
이런 게 아니었고.

제가 한 가지 국토부한테 여쭙겠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입주자적 제한 풀었
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김현아 위원 이게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저희
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10년 임대 만들 때 임대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자고 해서 중산층 임
대로 만들자고 하셨어요. 지금 뉴스테이의 원래
버전이 참여정부 때 10년 임대입니다. 그래서 이
때 평형도 넓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에

입주자 모집하면서 이때 사람이 안 모여 가지고 일부 입주자격제한 푼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 들어간 사람을 공공으로 보호해야 되는 서민이라고 단정 짓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저희가 건설원가하고 시세만 봐서 그런데 2009년에 입주한 단지들은 전세가격을 주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가서 사오 년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주변 전세가의 50% 미만인 데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년 사는 동안 누린 혜택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계산……

그러니까 이 단면만 보면 정종섭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개발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논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또 하나 국토부한테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할 때 민홍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 한번 답변을 해 봐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자체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죄송합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부에서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제기하는 것은 현행 제도에도 분명히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현재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서 시행규칙 별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은 건설원가 플러스 감정이 나누기 2분의 1이잖아요. 그거를 최고가격으로 하지 않습니까? 건설원가를 최저가격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10년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별표에 '우선분양전환가격은 그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가격을 최고가격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건설원가와 적정한 이익, 그 시간까지의 적정한 이익을 최저가격으로 하겠지요. 적정한 가격, 그렇지요? 거기에서 감정가격 그 사이에 어느 임의의 가격이 형성되어 줘야 되는데, 임대사업자가 그렇게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정가격 그대로 분양전환 신청을 한다는 거지요. 그 자체가 법 취지에 안 맞다는 겁니다. 시행규칙 취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하'로 되어 있는데 항상 최고가격으로 분양전환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임대사업자가 감정을 분양전환 신청가격으로 하면 그대로 승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도 자체가 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고 그걸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별로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승인 신청을 받을 때 최소한 그 주변의 시세와 관련해서 이 가격은 너무 높다 그러면 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제가 법안 낸 이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제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아마 여기에서 결론을 내지 못할 겁니다.

○**이우현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지금 뉴스테이법은 정부가 8년으로 정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러면 10년을 5년으로 하는 부분을 8년으로 뉴스테이법과 동일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그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나요? 조정안에 예를 들면 저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앞으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우현 위원** 그렇지. 지금 이 법안에 5년이니까 문제점이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임대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또 소급입법에 위헌성이 있을 거고 또 시세차익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법안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일반 임대아파트를 앞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점점 안 할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이우현 위원** 당연히 일반인이 시세차익이 없으면 적자 봐 가면서, LH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일반 사업자들은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곤란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정부도 위원님들이 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저기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한 부분에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하여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차관님 말씀, 정부 측 의견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전현희 위원 한 번만 조금 더……

○소위원장 민홍철 짧게 좀 해 주세요.

○전현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께서,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때 한 법안이다 그러니 만약 그게 야당 위원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취지라면 그것은 아니고요.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전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정동영 위원님 그때 부동산 대책 만들 때 같이 논의도 했고……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은 이해하시고요.

○김현아 위원 제가 8·31 대책 만들 때 있었는데 그때의 그 취지가 분명히 그런 게 있었고, 그게 지금에 와서 그때가 다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전현희 위원 그래서 저는 한번 정부는, 그때 정부나 지금 정부나 다른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이나 그런 것은 어느 정부든지, 정부가 또 공무원이 중립적으로 잘하실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이 사안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남에 살고 있으니까 강남 지역에는 LH공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정부 공기업이 했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분양을 받을 때 제가 알기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우리 강남 지역의 LH 주택이 몇 년 후면 오를 거라는 것 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10년 후인데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이것은 지나친 책임 방기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10년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제가 알기는 강남 지역의 경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어느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어도 그 부분은 여기는 분명히 분양,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걸 비전문가들조차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지요.

물론 전국의 다른 지역도 똑같이 10년 분양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강남권이라든지 수도권 경우에는 충분히 오를 거라는 게 정부가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정의라든지 공공주택에 대한 취지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한 것이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형평성에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안을 세워서서 그리고 또 입법, 국회의원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대안을 찾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리하시지요.

○이원욱 위원 질문 딱 한 말씀만……

○소위원장 민홍철 이원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짧게 좀 해 주시지요. 정리하시지요.

○이원욱 위원 자료 보니까 지난번에 19대 국회 때 유사법안 심의 시에 국토교통부가 ‘정부 입장에서 지역입주민들을 위한 다른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많은 전문가 간담회도 하고 또 언론의 얘기도 듣고 지역의 의견도 듣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했는데 가격을 손대는 것에, 그것이 본질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은 변함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검토를 뒀 했느냐 이렇게 비난을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원욱 위원 용역도 내셨어요, 용역?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때 19대 때 그 문제가 제기된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택 쪽 전문가들, 시민단체 대표도 포함해서……

○이원욱 위원 간담회 정도?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않았고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에

서도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랬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동영 위원 질문 하나 간단하게 할게요.

19페이지에, 예를 들면 경기 B단지에 18평형짜리, 2009년에 입주했는데 건설원가가 1억 6900만원이에요. 이것을 공공이, LH가 지었을 때하고 민간이 지었을 때하고 비교해서 민간자본의 몫이 들어갔고 공공지원의 몫이 들어갔는데 차관해서 공공이 지원한 택지, 공공이 지원한 금융, 공공이 지원한 세제 이런 것이 건설원가 부분의 몇 %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계량할 수 있나요?

가령 LH가 지었으면 민간이 지은 것보다 LH에 이러저런 부담이 있어서 민간이 LH를 대신해서 이렇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인데 LH가 했으면 LH에 이러저러한 부담이 있었을 텐데 민간이 해 줘서 공공이 할 부분을 덜어준 몫이 얼마고, 공공이 도와준 세제와 금융과 토지의 몫이 어느 정도를, 그 몫을 계량할 수 있는 것인지, 온전히 99%가 민간자본의 힘으로 이 사업이 된 것이고 공공의 몫은 거의 없었던 건지, 아니면 공공의 몫이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인지, 계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글썄요, 사후적으로는 계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똑같은 말씀이 들어가서, 이게 결국은 얼마나 개발이익이 날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정동영 위원 아니, 개발이익은 사후고 사전, 일단 건설원가 1억 6900만 원에 18평형을 지어줬는데 이것이 민간자본의 몫이 전체의 몇 %로 계량할 수 있겠는지 그걸 계산할 수 있나 없나 이거지요. 있어요, 없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계산은 가능하겠지요.

○정동영 위원 계산 가능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데 그 계산을……

○정동영 위원 말하자면 이것의 공공성을 재는 척도를 한번 계량화해 보자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투입된 재원 기준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정부의 용자금만 들어갑니다, 정부의 출자는 없고요.

○정동영 위원 용자도 시중금리보다는 낮은 것

아니에요, 자기 자체 금융 조달하는 것보다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조금 낮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시중금리보다 약 1~1.5%p 정도 저렴하게 임대기간 동안 용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또 토지도 그렇고, 세제 지원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토지는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 용지로 계획된 부분……

○정동영 위원 제가 이것 계량할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은 이것을 민간임대라고 하는데 100% 공공임대에 비해서 여기에 공공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느냐는 걸 국토부가 어떤 계량적 개념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순전히 이것은 시장에 맡기는 일이 아니더라는 얘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분석은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제 정리하시지요.

○김현아 위원 저 한마디만……

저는 지금 이것 방안 봤는데요. 18페이지에 19대에서 ‘다른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국토부의 반응은 저는 없는 게 맞다고 봐요.

○소위원장 민홍철 예, 없어요.

○김현아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청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토부는 자꾸만 가격을 건드는 것에 대한 디펜스만 하시는데 위원장님이 그걸 정리해 주세요, 가격이 아니고 제도적·절차적 문제에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소위원장 민홍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자꾸 가격을 어떻게 규제하면 여러 가지…… 정부가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데의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전환 함에 있어서 임차인들이 할 수 있는 조치 또는 권리가 거의 없어요. 단지 딱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가격 그대로, 그게 최고가격이잖아요. 법에는 ‘그 가격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임대사

업자가 그대로 지자체에다가 분양전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우리 불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재감정 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규정에는. 그렇지요? 그러면 재감정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그 가격이 분양전환 가격으로 그대로, 임대사업자는 ‘봐라, 재감정해도 똑같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그 가격을 그대로 지자체에다가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그 가격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못 댑니다. 조정할 수도 없어요, 현재 규정에.

그래서 19대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요. 그러면 최소한 가격 자체에 대해, 현재 법의 취지라면 최고 감정가격 이하로 임의의 가격이 돼야 되는데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지자체에다가 승인 신청 당시에 가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현재 심의제도가 있잖아요. 분양전환 제도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선언적인 규정이지만?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에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합당한지,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을 심의해서 분양전환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지 이런 경우에는 좀 인하를 권고할 수 있더라든지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층 있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별표에는 이 가격을 넘을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게……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사전적으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까지 찾은 거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서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이결 잘 보고서 결정을 해라 하게 되면 또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딱히 어떤 대안이 가능

할지를 지금까지 나름 공리를 해 봤는데 찾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불리 그냥 약속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요, 각 지자체별로 승인 신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그 지역의 아파트 시세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임차인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그 조정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가격을 권고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화해를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간이 너무, 심사가 진행 돼서 벌써 4건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요, 하여튼 이 안도 좀 심도 있는, 정부 측의 여러 가지 입장 이런 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잠정적으로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4개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 4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4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정부 측에서 수정안 해 가지고 위원회 대안으로 한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률안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마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단을 의장님께서 초청해서 오찬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점심식사 드시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주호영 위원** 2시에 하지요, 2시에.

○**소위원장 민홍철** 2시에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민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 발의)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 발의)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 발의)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 발의)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

○소위원장 민홍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6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성일중 의원안입니다.

공동주택에 장애인 쉼터 설치를 법률에 의무화하자는 내용인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 법률의 체계를 감안할 때 여러 복리시설 중에 장애인 쉼터만 법률에다 직접 규정하는 방안보다는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장애인 쉼터는 주민공동시설에 해당되어서 건축법령에 따라 이미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23쪽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입니다.

주택단지에 공공어린이집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자는 내용인데 이러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들이 이미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정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24쪽에 김현아·이우현 의원안이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양이 많은데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과 관련하여 수정의견으로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지자체의 수리 거부사유 등을 신설하고 관련 정

보 공개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쪽입니다.

조합원 탈퇴 시 납입금 환급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인데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서 개정안에 소극적입니다.

현행 법령상 조합 탈퇴 및 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 조합원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합 탈퇴를 유도할 수 있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재안으로 법률에 조합원 탈퇴 및 환급 신청 근거를 명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 구체화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표준업무대행계약서 작성·보급 시에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일반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업무대행자 범위 중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관한 업무’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까지만 대행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7쪽입니다.

시공자의 시공보증서 제출 의무화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38쪽입니다.

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토지소유규제 완화는 사업의 불투명성을 높여 조합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또 대체토론 과정에서 임종성 위원은 현행 95% 토지소유요건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90%로 완화하고 잔여토지 매도청구도 90% 소유 시부터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22쪽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다만 여기 한 가지,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 시행령에서 이러한 설치의무대상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

문에 장애인 쉼터도 지역 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3쪽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24쪽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30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수용하는 데는 의견을 하지 마시고 의견 있는 데만 하시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소위원장 민홍철 수용하기 곤란한 부분.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러면 38쪽에 김현아 의원님 제안 개정안 중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요건 완화는 이걸 완화하게 될 경우에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대체토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야 됩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 지금 22쪽과 관련해서 장애인 애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근본적으로 이걸 더 시설을 추가하고 이런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종명 의원 얘기서부터 시작하면 저는 이게 다 공통된,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특수계층으로 분류했지만 이제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정상인이지만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복리시설에서, 즉 배리어 프리 같은 일종의 무장애시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참에 검토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법을 직접 개선한 것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공감합니다.

○김현아 위원 그래서 그걸 저는 검토하실 것을 조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지금 수용 불가라고 하신 토지사용 승낙서, 38페이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95% 토지소유권 확보는 굉장히 무리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일반 분양자들은 계약금 10%만 내면 주택사업 절차가 들어가는데 이걸 조합이 직접 하는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95% 토지사용권을 수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부담이 초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택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의견이나 임종성 의원이 대체의견으로 내신 것에서 조금 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공급이 과잉 우려가 있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은 일단 거둬들이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제도개선 사항과 맞물려서 이걸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낸 것 중에 30페이지 선의의 피해자 구제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는데 이게 저희에게 민원이 와서 그런 건데요. 처음부터 집이 있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에 임의적으로 가입시키고 정식 조합원이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납입한 돈, 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위 규정에 위임한다고는 하셨지만 저는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처벌이나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것 하나 갖고는 실행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임하실 때 만약에 조합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돌려주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22쪽이요. 여기 장애인 쉼터 이게 보면 비고에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의무설치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좀 다른 게 장애인들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휠체어가 아니라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것 보셨잖아요. 유모차 끌고 다니고 그리고 경로당을 들어가려면 이런 특별한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더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정부에서 배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박덕흠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애인, 노약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좀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38페이지예요 95%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이지요, 그렇지요? 사용권원 확보. 그러면 소유권과 사용권을 포함해서 95%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소위원장 민홍철** 그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소유권만 되어 있는데 소유권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권원……

○**이원욱 위원** 이것 사용수익권원으로 해 가지고 95%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다 그냥 사인만 받고, 토지 사용 승인만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임종성 의원안 정도의, 90% 정도로 완화하는 것은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권원 확보에는 사용승낙서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가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95%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100%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알박기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의 여유를 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위원장 민홍철** 그런 문제는 있겠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마 18대 국회에서 9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이런 이유로 해서 원래대로 남겨 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차관님, 이게 사실상 알박기화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매수청구권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을 다 토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주택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 보이며)

저희 동네도 보니까 요만큼만 더 사면 아파트 모양이 이뻐는데 땅을 끝까지 안 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상하게 주택조합이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은 95% 확보하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95%라고 하는 게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90%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주택시장의 문제가 또 걸리기는 해요. 풀어 줘다가……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화 필요가 있는데 지금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적합하지 않아서……

○**이원욱 위원** 조금 미뤄봐 볼까, 폐기하지는 말고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다음에 한번 다시 올려도 되고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요?

○**이원욱 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참고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체 설립되어 있는 주택조합이 2009년부터 설립된 게 204건인데 그중에 106건이 2015년 한 해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현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장치를 내신 것도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당분간은 좀 엄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다음에 이걸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아 위원** 이것은 이번에 그냥 접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김현아 의원님 법안이니까, 점으신다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김현아 위원** 예, 이것은…… 대신 아까……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에 다시 내시기로 하고, 왜냐하면 일부만 남겨 놓고 일부를 통과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김현아 위원** 그런데 아까 조합원 탈퇴 그 부분은 살아 있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것은 살아 있어요. 다른 것은 수정의견으로 살아 있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이걸 살아 있

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원래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러면 다음 페이지, 40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40쪽.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이종명 의원안에서 공동주택 시공 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구조 및 재료로 시공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인데,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비장애인 입주 시 공간 활용 제한 및 생활불편 등을 유발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합니다.

41쪽입니다. 박범계 의원안입니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현행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도 융자 및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2건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 수용 곤란이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개정안 수용 곤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 이상 4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 및 제9항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주택도시보증기금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14시21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주택도시보증기금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43쪽입니다.

박범계 의원님께서 리모델링기금에 대한 기금용자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인데 방금 앞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원님들이 이 법안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보류키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심사할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44쪽,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시키면 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세요?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택도시보증기금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23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페이지 48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인데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도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간의 연계를 규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기본법에 연계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49쪽입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보완·조정 및 심의와

관련해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이런 규정을 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인데 조정식 위원장님이 대체 토론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상호 상충하는 경우 조정방안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48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49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이고 대체토론의 조정식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종합계획은 원래 수립할 때 환경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정책위원회보다 더 상위 위원회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이 환경보전계획과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방안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14시25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51쪽이 되겠습니다. 박덕흠 의원안인데요.

투자선도지구 정의와 관련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는데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고요.

52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일부에 대한 대행개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검토보고 중에 다만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대행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 제거

를 위해서 사업자 선정의 경쟁입찰방식 도입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에 따라 수정의견으로 사업시행자가 대행개발을 하게 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대행개발의 대상사업자, 대행개발 사업 등을 보고하도록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54쪽입니다.

개발사업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사업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 효과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55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일괄 승인과 관련해서 일괄 승인을 의제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고 일부 조문의 표현이 조금 중복돼서 그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도록 저희가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지금 대행개발 대상사업자 요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보고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민간이 대행개발을 하면 분명히 특혜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단지 보고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다시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동영 위원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 결국 지방공사가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그 부분을 민간한테 넘기자는 것인데 예를 들면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부분의 역할을 저는 더 키우고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성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자꾸 민간한테 대행개발까지 열어 주는 것이 민간 건설업

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더구나 거기에다가 건설비를 토지로 준다, 그 토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도록 한다…… 이중특혜 소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

○김현아 위원 대행개발의 원래 취지는 공공기관이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사업을 나중에 조성한 택지비로 갚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재원이 들어가기 어려운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대행개발의 주체가 공공과 민간이라고 해서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을 그 해당 지역 공사에게 주는 방법이 있고 민간에게 주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저도 전현희 위원님 의견에 동조를 하는데 단순히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국토부에서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취지는 이게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개 재정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업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계속 자금조달이 안 돼 가지고 표류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현희 위원님이나 또 김현아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령에다가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또 대행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나 그 사업자의 선정절차를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감독에 대해서도 규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싶은데요, 그게 시행령에 할 문제는 아니고 법안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법체계상……

○전현희 위원 보고하는 게 관리 감독 방안이 아니잖아요.

○정동영 위원 역세권 개발 외에 또 뭐뭐를 대행개발 하자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요청한 사례는 역세권 개발 사례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마련되면 다른 사업이 추가적으로 발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우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그런 걸 열어 주면 되지 일반적으로 다 대행개발로 풀어 버리는 건……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대행개발 사업……

○정동영 위원 시행령이 아니라 모법, 법 개정 안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데 법에다가 이걸 규정하는 것은……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개발법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업까지 대행개발을 허용할 것인가,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넣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경주 역세권 개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걸 건의했다면 우선 이걸 할 수 있게 터 주면 되는 거지 이걸 빌미로 해서 전체적으로 민간 대행개발 쪽으로 터 버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것만 해 줘라 이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글썄요, 그런데 법령을 하는데 하나를 딱 용도를 정해서 법에 규정하는 것이……

○정동영 위원 아까 시행령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행령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데 일단은 이 대행개발이라는 근거를 마련해야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업 범위를 아예 시행령에서 역세권으로 정하자는 말씀인데……

○정동영 위원 그 요구 때문에 이 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국토정책관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보충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국토부 국토정책관입니다.

위원님, 여기에 있는 대행개발은 이 법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나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을……

지역개발사업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위낙 형편이 어렵고 못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우선 하되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절차를 거쳐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세부 절차는 시행령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서서 먼저 규정되었던 다른 모든 타 법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종류를 예를 들면 역세권, 아파트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다면 저희들이 시행령을 제정할 때 그때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조금 더 특화해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이라고 법에다가 넣기에는 이게 다른 법하고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앞서 다른 입법 사례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맞춰서 넣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를 들면 무슨 사례가 있어요?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산업입지법에서는 예를 들면 시군 산단을 만들 때 자기들 돈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재정능력이 안 되니 그러면 민간업체를 경쟁을 통해서 뽑고 전체 용지 중에서 일정 비율 이하를 그 업체가 대행으로 개발하되 그 사업으로 나오는 땅의 일부는 그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 소요를 절약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래서 이거는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입찰공고를 한 다음에 들어와서 가격경쟁을 거친 다음에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꼼꼼히 규정해 버리면 다른 법하고 똑같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

○**이원욱 위원** 박덕흠 위원님께서 투자선도지구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빼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낸 건 개정안의 취지가 지역개발사업구역 중에서만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지역개발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에

도 민간이 투자해서 도심개발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원욱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에다가 역세권을 못 박는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크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신 말씀만 보면 투자선도지구에서 박덕흠 의원님이 내신 개정안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정하면.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용어를 고치는 것인데 있는 45조 규정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에서도 투자선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되어 있는데 용어의 정의에서는 구역 내에서만 하도록,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사후적으로 그 용어의 정의를 고치는 겁니다.

○**이원욱 위원** 이미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예, 이미 되어 있는 것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보면 소외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많이, 재정 문제가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법안 수정의견을 낸 겁니다, 참고로.

○**소위원장 민홍철** 전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대행개발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겠는데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외된 지역이나 예산이 부족한 곳에 민간이 대행개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법은 법입니다. 그 내용이 이 법에는 없습니다.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도 그거를 시행령으로 그렇게 구현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일반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취지는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정부의 의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갈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법 자체에 기본적으로 대행개발의 요건이라든지 사업자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아무런 명시적인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예

를 들어 법을 악용해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반 민간사업자가 이 법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습니다.

더구나 거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의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은 단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국토부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민간에게 대행개발을 위임할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여기에 대한 요건도 법령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보고가 아니라 최소한의 관리 감독을……

아까 차관님이 법에 규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그걸 왜 규정을 못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요. 좀 더 법을 정치하게, 이게 악용 소지나 왜곡되지 않도록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래 대행개발이라는 게 다른 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행개발이라는 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법에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법에서 이 대행개발에 대해서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데 대한 규정이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시행령에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시행령에 있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일단 그걸 갖고 전현희 위원님한테 그게 적합한지,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안에서만 새롭게 이걸 집어넣는 거고 이미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그것을 시행령에 담으실 생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지금 전현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더 강제할지 아닐지를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논의를 보류해 놔다가 국토부가 정리해서 보내 주시든지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시행령에 위임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법에서 이걸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여기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시니까 그 자료를 갖고 충분한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전현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53페이지 7항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정부 측에서는 시행령에 다 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업 등에 관하여 보고하고 지정권자는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수정의견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에 관하여 보고하고’ 그 후단에다가 ‘지정권자는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실효성 있는 감독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대상사업과 대상사업자의 요건도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좀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좀 더 많이 수정이 되어야 되네요.

○이원욱 위원 위원장님, 하여튼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이원욱 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 논의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좀 보류하시지요. 설명을 들으시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일단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제안하신 7항의 제안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해당 법률을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진행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일단 전현희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안건은 잠시 보류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14시43분)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 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유인물 61쪽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국가산단과 연결한 다른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을 허용하자는 내용인데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국가재정의 과다한 예산투입 문제로 약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62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인데요.

1번,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허용하자는 내용인데 산학연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여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봅니다.

63쪽입니다.

중복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절차 등을 명확화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에 행복도시,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경우 용지개발 및 공급방법 등에 대하여 개별 법률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서로 상이하셔서 법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64쪽입니다.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을 허용하는 내용인데 산업단지마다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각기 설치할 경우 재정집행이라든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65쪽입니다.

중토위로 하여금 국가지정 도시첨단산단 토지수용재결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건데 지정권자의 위상에 맞게 중토위에 재결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66쪽입니다.

국가가 산업단지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타당성 평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검토보고에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 타당성평가를 확대하는 것

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인데 산단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한 용적률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인데 국토부 의견은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쾌적한 보육환경, 보행동선, 안전 등을 고려하여 통상저층으로 설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약간의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한 가지 빼고는 다 수용입니다.

61쪽에 국가산업단지와 연결한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래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목적과 지정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연결했다는 이유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지금 현행법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접한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것은 수용 곤란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61페이지에 국가산단하고 연결한 산단 전환 허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연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합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관리체계는 지금도 일반산단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김현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이게 인접한 산단을 보면 해당지역이 대구, 울산, 부산, 청주, 포항, 군산입니다.

이게 연결된 일반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될 경우에 관리영역의 일원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두 단기간에 각종 계획이나 통합화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현재 전국 산업단지가 몇 개인지 아세요? 1137개인데요. 일반산업단지가 602개입니다. 국가산업단지하고 연결한 일반산업단지가 8개뿐입니다, 8개. 그렇다면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더라도 분류체계 혼선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많다면 모르는데 8개뿐이라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전환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 인접한 것은 8개라 하더라도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가산단으로 해 놓을 경우에 나중에 노후기반시설의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할 때 국비 지원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8개이기 때문에 전환을 해도…… 그러니까 저희는 분류체계의 문제보다는 처음부터 지정목적과 지정권자가 다르고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나 비용 절감은 지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인접한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산단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산단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연결한 게 일어날 수 없다고 보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왜냐하면 저는 8개에서 더 이상 안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국토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그런데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게 제가 이해한 대로 인접한 공단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거라면 지금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을 해서 국가산단과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도 일반산단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먼저 전현희 위원님 하시고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현희 위원 저는 정부의 의견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가산단은 일반 도시·농공산단과 달리 국가 기간산업의 육성이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산단은 지역산업 육성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판단해서 조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산단의 목적이나 취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단지 인접했다는 취지로 허용을 한다면 산단의 원래의 지정목적과 다르게 국가산단이 과다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그러면 단지 그렇게 개발되는 것에 그치느냐, 재정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검토 없이 인접하다는 이유로 재정투입을 한다는 것은 법의 요건에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정종섭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鄭宗燮 위원 두 분 말씀 다 타당성이 있으신데 박 위원님 말씀에 더 덧붙여 가지고 지금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일반산업단지 들어오고 그다음 나중에 20년 후에 국가산업단지 들어오고 또 10년 전에 일반산업단지 들어오고 나중에 연결한……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해서 분류체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연차별로 보니까 붙어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리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이게 다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일반산단이든 국가산단이든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어느 쪽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성공적이면 괜찮은데 이게 다들 비틀비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당되는 게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대구, 울산, 오송, 포항 보면 그 안에 있는 주력산업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력산업들이 거의 같을 때는 이걸 묶어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게 만약에 선례가 될 것 같으면 옛날에 들어간 일반산단 옆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국가산단을 유치해서 결국은 2개를 다 묶어 가지고 국가산단으로 가면 국가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앞으로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우려도

사실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현 상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엄격한 기준하에서 해 보면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해 봤을 때 둘 다 죽게 하는 것보다는 이 2개를 연결했을 때 차라리 살아날 수 있는 게 뭐다, 그래서 살릴 것은 살리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선례가 돼서 일반산단 옆에다가 국가산단을 유치해서 2개를 합쳐 가지고 국가산단, 이것은 안 된다, 뭔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그렇게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덕흠 위원님께서 해당되는 게 8개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까만 대구국가산단과 연결해 있는 것만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대구산단에만. 그래서 여기를 어느 것을 하고 어느 것을 안 하고 기준을 세워서 한다는 게 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은……

○鄭宗燮 위원 그것 주력 산단으로 보면 되니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 그러니까 원칙의 문제이고 또……

○박덕흠 위원 주력 산업을 봐야지요, 그 전체 다섯 개를 보지 말고.

○鄭宗燮 위원 주력 산업이 있는 것은 달성2차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합친다 해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주력 산업이 결국은 똑같은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년 전에 일반산단 해 봤다가 옆에 바로 붙어 국가산단인데 실질적으로 다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 계속 둘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겠느냐 그런 문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국가산단으로 바꿨을 때 실익이라는 것이 통합 운영을 한다는 건데 통합 관리하는 데는, 아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국가산단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는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굳이 국가산단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력 산업도 겹치고, 옆에 있어서 효율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같이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장치는 지금도 마련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또 기준을 세워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 부분은 좀 더 국토부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제도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하시지요.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67페이지의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용적률 관련된 건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용적률이 얼마인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어린이집이 지금 국계법상 한 30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례에서 대개 한 200이나 250%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요즘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반 사적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뒀을 때 그게 과도한 개발이익이나, 그 이익의 사유화가 저는 우려된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이것은 산업법 안에서 공장 안의 그 지역 노동자들의 육아문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용적률에 대해서 약간 특혜 규정을 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과도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저층구조로 설계돼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셨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것은 약간 핑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실내에서 충분히 넓은 공간을 만들고 애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 300% 더 준다고 해서, 이게 바닥면적에 따라서 층수가 아주 높게 가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가 개정안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수용하는 입장인데 그게 편견이 됐든 현실이 됐든 어린이집이 그래도 저층구조가 편한 게 아니냐,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 수용 곤란 입장이 아니라 일단 개정안은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고요.

○**김현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수용입니까?

이게 16항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수용이라고 말씀……

○**소위원장 민홍철** 수용으로 돼 있어요, 16항? 그러면 이게 다르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원래 수용으로 돼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더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4시59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민홍철 의원님이 낸 안인데요, 지금 영암·해남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결신청기한이 올해 말까지 돼 있는데 보상이라든가 재결 완료가 올해 말로 안 되기 때문에 1년을 더 연장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할 경우 입법적인 특혜라든가 법적 안정성의 침해 소지가 있지만 영암·해남 기업도시 보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이 진행이 돼 와서 개정안대로 연장해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참고로 이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일단 수용을 합니

다. 그런데 이게 이미 한번 재결신청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한번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조금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간에 감정평가가 이미 진행 중이고 재결 여건이 좋아졌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 한번 마지막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도 관리를 강화할 생각이고 전라남도와 문체부하고도 이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관리를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5시02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71쪽입니다.

정운천 의원안입니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정의를 종전에는 개별 사업별로 열거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니 또 특정한 사업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새만금사업이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새만금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고, 새만금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승인 시 관계부처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 행정기관 간의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잔여매립지에 대한 장기임차 및 매수 허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매립지 장기임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76쪽입니다.

관계 행정기관과 인허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인데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을 신속하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새만금위원회 심의 사항에 규제개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 사항을 확정하려는 그런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78쪽입니다.

국내기업에 국·공유토지 및 건물 장기 임대를 허용하자는 내용인데 검토의견으로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100년간 장기 임대하는 경우 과도한 특례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 개정 시 적정한 분야의 국내기업에만 장기 임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79쪽입니다.

새만금청장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수정의견으로 법문 표현의 표준화를 위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82쪽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권한을 전북도지사에서 새만금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인데 새만금단지 조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단지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83쪽입니다.

새만금 입주 의료기관에게 부대사업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84쪽입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새만금지역의 열악한 입지여건을 상쇄할

만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려는 취지입니다.

85쪽입니다.

오수 및 폐수 지역의 토지 매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인데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원만히 추진하고 새만금지역의 수질오염을 개선하려는 입법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승용 의원안에서 법정형 정비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법정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는 입법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71쪽의 새만금사업의 정의 관련인데요, 이것 정부가 수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기존의 개별 사업을 열거하는 이 포지티브 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 네거티브로 규정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넘기신다는 것을 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수용하고 추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새만금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 해서 결국은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김현아 위원 저는 이것 되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에 법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 이게 가능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개별적인 사업 외에도 새만금사업의 개발계획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넓게 사업을 인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대요, 지금 개정안에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문구 수정을 개발·관리·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앞으로 토지사용권을 100년 정도 준다고 하는데 계속 신규 개발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열거하지 않는다면 여기 용어에 개발·관리·정비라고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뒤의 토지사용권 양쪽에서 100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도 100년을 주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9년에서 중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이 100년의 근거가 뭔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같은 법에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100년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개발지원법상 투자선도지구의 국내기업에 대해서 50년 임대 후 갱신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한 다음에 한 번 더 50년을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이나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국내기업도 100년 임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 새만금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같은 법의 취지에 맞는 국내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100년 임대를 허용하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업이 100년을 임대했는데 기업 활동을 동일하게 유지를 않고 다른 것을 하면 토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계약조건, 어차피 토지이용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승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이 돼서 몇십 년 된 장수기업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외국기업한테도 100년을 준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지금 국내기업에 대해서 적정한,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맞춰서 국내기업에 이것 적용한다는 게 저는 다른 법

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것 아무것도 허용 안 하면서 이것은 좀 과도하게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새만금사업의 정의는 11조에 규정이 돼 있어서 용도별로 뭐뭐 할 수 있도록, 그 개발실시계획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새만금사업의 정의를 좀 바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는 몇 가지 열거한 것으로만 하니까 한정돼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포괄적 정의의 규정은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것 부연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개발사업 정의하기를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포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항을 준용해서 지금 새만금사업의 정의를 규정……

○김현아 위원 그러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은 정기적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수정을 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저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관리·정비라고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다음에 관리·정비가 가게 되면 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재정비하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뒷부분에 대한 관리를 다 담보할 수 있어서 그것을 조금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관리계획을 뭔가……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일어나면 그것에 수반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든지 그런 조금 세부적인……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수정과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했고요. 시행령 개정하면서 여기에 100년 임대를 허용할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요건도 규정하고 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도 시행령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전현희 위원 83페이지, 9번 새만금 입주 의료기관에게 부대사업 허용 특례 부여안 삭제 의견입니다.

지금 의료법인의—아마 국내·국외 망라하고—부대사업에 온천이나 숙박업 특례를 부여하는 건데요, 이 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차관님께 아시는지 모르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되기가, 지금 가장 난관의 원인이 뭔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전현희 위원 의료영리화 관련된 조항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게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게 의료영리화의 대표적인 조항이거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해외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외국 병원들에게 의료법과 달리 특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실제로 송도라든지 경제자유구역에서 이 현행 의료법과 맞지 않은, 그렇지만 특례로 경제자유구역법에 인정한 그 내용이 국회 복지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또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의 의료법 범위를 초과하는 의료영리화 조항을 이 규정에 넣으면 결과적으로 이 규정 때문에 아마 이 법이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78페이지의 국내 기업에 건물 장기 임대 허용 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기존 현행법은 외국인의료기관에 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은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 이미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기업에 한해서 이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인데요.

물론 국내 기업이라는 조건에 국내 병원, 국내 의료법인이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영을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지만—국내 의료기관에도 MSO라는 기업을 통해서 병원을 관리하

고 운영하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낀 국내 기업이 이 규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료법인들에게 이런 새만금지역에 건물 장기 임대가 허용되는 우회적인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에 한하여 규정하는 이 부분을 대통령령에, 국내 의료기관에 MSO 이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아예 법에 ‘의료기관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넣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부대사업 허용은 반드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위원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법이라는 게 다른 어느 법에 관계없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다 푸는데, 다른 데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새만금 지역 안에서 의료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지금 새만금 지역이 1억 평이 넘는데 이것 빼면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 이런 것 못 하게 하면서 앞의 규제 다 푸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의료 민영화하고 외국인법이나 특정 지역에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같이 연결시킬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근원적으로 문제가 되신다고 하면, 이것 하지 못하면 저는 앞의 것 푸는 것 다 의미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현희 위원 저는……

○소위원장 민홍철 발언권을 얻고 좀 해 주시지요.

○전현희 위원 예.

지금 규제를 푸는 의미에서는 그런 지적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영리화 관련해서는 이것은 국가적인 이슈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의료영리화 관련된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단지 규제를 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과 또 의료영리라는 가치적인, 국가적인 어젠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이걸 규

정해서 우회적으로 하겠다라는 이 시도는 반드시, 틀림없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 지역에 일정 부분 경제자유구역이 설치되어 있지요? 새만금에 경제자유구역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전현희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해서 현행법상 허용되는 그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이 허용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이랑 상관없이 별도로 새만금 전 지역에 이런 의료영리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민홍철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토론이 좀 있는 것은 뒤로 해서 하자고요.

○소위원장 민홍철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뭘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앞에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새만금사업은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큰 규모의 사업이고 이것은 역대 정부가 성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같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투회의를 거치면서 새만금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넣은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이게 허용되는데 새만금지역의 일부만 지정되어 있고 또 만약에 오늘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로 개정되면 지원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신다는 그런 정신을 받아 주시면 결국은 그 구역을 새만금 내로 확대하는 것이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별개의 문제지요, 경제자유구역하고 새

만금 개발 관련된 것은. 또 법적 근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물론입니다. 그런데……

○소위원장 민홍철 아마 현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새롭게 그 영역을, 지역을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게 서로 논란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박덕흠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 조항은.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정의 부분에서 삭제해 버리는 게 이게 저도 좀…… 김현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개발·관리·정비’ 이거라도 명시적으로 넣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만약에 새만금청장의 고시로 하게 돼 버리면 본래의 새만금사업의 목적과 달라져 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50년 플러스 50년, 100년간 임대…… 현행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업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소위원장 민홍철 그런데 저는 이 현행법 자체가 처음에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주권을 제한하는, 치외법권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99년간 조차해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을 100년간이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개념을 했는지 참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것을 한다는 게…… 그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고려할 점을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기간에 대해서 치외법권 지역도 99년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 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 번 50년은 이해가 되지만 그다음에 한 번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재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49년만 한 다든지 뭔가 좀 상징성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의견이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도 국내 기업 중에서 첨단산업과 관광사업은……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국내 기업은 관계없겠지요, 우리나라 기업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외국 기업 것을 낮추자는 말씀이십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외국 기업을 100년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50년 플러스 50년?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요, 지금 개정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첨단산업과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허용되어 있는데 추가로 국내 기업에 대해서 100년, 국·공유지 임대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현행법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왜 100년으로 처음에 그렇게 제정됐는지.

그러면 추가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아니, 아닌데요.

○**전현희 위원** 지금 새로 삭제하고……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삭제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의료부분은 더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조항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면 이 법은 폐기가 되는데요.

○**소위원장 민홍철** 폐기가 돼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예.

○**소위원장 민홍철** 아, 그 하나만 분리할 수 없지요?

그러면 전체를 다시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여기서 결론을 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전현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의료법인에 대한 것은 삭제하도록 하고……

○**소위원장 민홍철** 삭제하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삭제하고 김현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개발·관리·정비’로 수정하고, 저희가 시행령에서 추가로 이 100년 범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는 국내 기업에 한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

으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박덕흠 위원** 이것도 좀 더 의논을 해 보고……

○**이우현 위원** 아니, 전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법인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있어요? 그러면 뭘로 개발합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나?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면 되지 않아요?

○**전현희 위원** 그러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이랑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아니아니, 거기는 특별법이니 까……

○**박덕흠 위원** 그래도 어차피 그쪽 지역인데, 그쪽 지역 해 준다는 내용인데……

○**이우현 위원** 아니,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에는, 지방에도 그런 종합병원 같은 게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그걸 지금…… 서비스산업발전법 만들어 통과되면 나중에 해야지요, 누가 다음 정권 잡아도 그것은 해야지.

○**이원욱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민홍철**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제가 나갔다 와 가지고 논의에 갑자기 끼어드는 게 좀 이상할 수 있기도 할 것 같은데……

이것 정자구역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기업도시법하고 제주특별법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여기에 국내 의료법인을 제외하고 외국 의료법인만 끼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아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의료법인을 유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거 규정을 두는 건데……

○**박덕흠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민홍철** 잠깐만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이 조항을 빼고 여기서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계속 심사할 것인지……

○**박덕흠 위원** 심사를 한 번 더 하시지요, 이견들이 있으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는 전현희 위

원님 삭제 제안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원욱 위원 이 정도는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현아 위원 정부가 양보하는데 할 말 없네요.

○박덕흠 위원 정부가 양보하는데 뭐……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가 양보하시는데요 뭐.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전현희 위원님 것만 정리가 되시면……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전현희 위원 외국인 의료기관,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하지 못할 제도적 장치, 토지 장기 임대 그 부분도 같이 좀…… 시행령 할 때 그 부분 좀 챙겨 주시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은 시행령에서 생각하시고요.

○전현희 위원 그러면 저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아까 몇 항입니까? 그 조항은 삭제……

○전현희 위원 부대사업 조항은 삭제……

○소위원장 민홍철 예, 삭제하고 나머지는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지역 개발 지원법……

○소위원장 민홍철 몇 페이지지요?

○박덕흠 위원 13항입니다. 전현희 위원님이 ‘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항을 넣고, 전현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보고해야 된다’를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고치고 그다음에 8항에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업자를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완조치를 하면?

○소위원장 민홍철 그 부분은 아까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 다 하시고, 심의 다 하시고 그것은 마지막에 하시지요.

○박덕흠 위원 마지막에 내가 없을 것 같아서.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15시30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88쪽입니다.

함진규 의원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농체험 시설 등을 설치하자는 안이고요, 89쪽 이원욱 의원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과학관을 설치하자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90쪽 이언주 의원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훈회관 설치를 허용하자는 내용들이신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정부 측 입장은 3건 다 개정안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24일 날 논의를 다시 부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계속 심사로……

○이원욱 위원 예, 이것은 일단 일차적으로는 세 가지 다 빼고요.

○소위원장 민홍철 3개 다 그렇습니까?

○이원욱 위원 예.

○윤관석 위원 거의 뭐 같은 거라……

○소위원장 민홍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5시32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2건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유인물 92쪽입니다.

최연혜 의원안은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역에 경관·미관지구를 추가하자는 내용인데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취지와도 충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93쪽입니다.

민홍철 의원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제도를 적용하자는 내용인데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이지만,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 중 과태료 수입으로 포상금을 우선 지급토록 하는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타 내용은 자구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5쪽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부동산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즉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96쪽에 부칙과 관련해서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민홍철 의원님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최연혜 의원님 안에 대한 것도 대체로 수용하고…… 개정안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토지이용 허가로, 그것도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만으로 다룰 일은 아니고 국토계획법이나 지자체 조례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4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15시36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 이상 4건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99쪽입니다.

노웅래 의원안은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논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00쪽입니다.

나경원 의원안은 무등록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금액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인데 법정형이 3년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벌금도 3000만 원으로 맞추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01쪽에 전세숙 의원안은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내용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김현아 의원안인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거짓 또는 과장 광고 금지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인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법 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부동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거짓·과장 표시광고행위의 유형과 범위, 판단기준을 정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4건 모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제가 발의했던 안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이것에 공감하고 제가 여기에 부속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중개업무 하면서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 논란의 가장 핵심은 중개사들이 본연의 중개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도 중개대상물을 확인해 주는 문제가…… 제가 왜 허위광고나 매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분양물량에 대해서는 허위광고에 대한 규정이 그것도 중개사법에만 있는데 기존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고 또 제가 접수한 민원에 의하면 매매거래 말고 임대차 거래에서, 예를 들어서 방 한 칸을 빌리는데 이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 아니고 교육시설, 예를 들어서 고시원 안이나 아니면 독서실 안에 주거용 건물을 하나 임대하면서 건

축대장에는 주거 및 교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주택으로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가 보니까 이것은 집이 아니라 건물 안에 방 한 칸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매 거래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거래에서 명확하게 물건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요.

이게 근원적으로 가게 되면 전속계약제도가 공인중개사법에는 있지만 실제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위광고나 표시광고에서 허위매물을 저희가 하려면, 사실은 전속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다른 데 매매나 계약을 올릴 수가 없는 데 저희는 전속계약이 없다 보니까 하나의 매물이 10개의 중개업소에 동시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하나가 계약이 됐을 때 그것을 동시안에 확인을 못 하면 한쪽에서는 허위광고로 지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법 안에 있는 자기네 전산망을 이용해서 매물 등록하는 제도하고 전속계약제도 등을 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시행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들 토론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8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26항 및 제27항 이상 2건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3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3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15시41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4건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32항 안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최재영 기재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장이 출석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지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예, 왔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04쪽 주승용 의원안입니다.

댐건설장기계획 수립·변경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변경 내용을 제출하자는 내용인데 수정의견으로 유사 입법례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국회에 제출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 제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106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전에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지역주민의견 수립 등 댐 사업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인데 상당 부분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두 번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수자원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심사 중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고요.

수정의견으로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주요 사항을 규정한 후에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변경·승인 시에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민홍철 위원님께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인허가 의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댐건설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는 농어촌 도로 관련 허가의 경우에는 인허가 의제사항에 현재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도로 이설 등의 허가를 관계기관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면 댐 사업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군남댐 건설 시에 농어촌 도로에 대한 인허가 절차 과정이 한 3년 6개월 정도 걸린 점을 참고했습니다.

111쪽입니다.

댐건설 완료 고시 전에 댐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인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민홍철 위원님께서 댐 시설물은 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시 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현재 입법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셨고, 저희들은 지금 정부가 낸 안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12쪽입니다.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가산금 및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의 반환, 수익자부담금 납부기피자에 대한 가산금의 강제 징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법률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113쪽입니다.

박맹우 의원안입니다. 기존 댐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자는 의견이신데 수정의견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낸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향후 건설되는 댐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필요하므로 ‘기존에 건설된 댐’을 그냥 ‘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댐의 성질별로 요구되는 평가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댐 관리청에서 댐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용수 배분은 용수공급능력과 홍수조절능력 등에 대한 댐의 평가결과에 따라 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후속대책에 해당하므로 댐 평가항목 중에 용수배분현황은 제외하자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댐의 특성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댐의 재평가 의무화를 임의실시로 변경하자는 것과 기존 댐 평가를 임의조항으로 변경 시에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존 댐 평가의 결과 및 사후 관리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15쪽에 박덕흠 의원안입니다.

중·소규모의 댐에서도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을 실시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 댐의 기준을 확대하자는 의견인데 민홍철 위원님이 무분별한 소규모 댐 건설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고, 저희들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미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116쪽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 댐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중·소규모 댐의 정비사업비 산정기준을 신설한 내용인데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정 기준을 저희가 참고로 표로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에 댐 건설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재원을 국가에서 보조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 민홍철 위원님은 중·소규모 댐 건설을 너무 용이하게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고, 저희들은 정부의 제안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주승용 의원님 개정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박맹우 의원님 개정안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박덕흠 의원님 개정안은 기재부에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을 들어 보시고 논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기재부 의견을 들어 볼까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저희들 기재부에서 박덕흠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취지는 원래 기본적인 보상이라든지 이주 정착을 다 해 주는데 워낙 큰 사업의 경우에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공동체 기반을 형성해 주고 경제기반이 상실된 것을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00만 용량까지 해 주고 있는데 의원님 안은 20분의 1로 줄여 가지고 아주 작은 댐까지 모두 다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이시기는 한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당초 취지 자체가 공동체를 복원시켜 주고 경제적 기반을 다시 형성시켜 주는 거라면 너무 작은 댐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지원할 만한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2000만에서 20분의 1로 줄이자고 하셨으니까 너무 작아서 그건 국토부하고 의원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이라든지 아니면 1200만이라든지 이렇게 조정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재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아예 거부는 안 하시네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왜냐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보면 1600만 정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덕댐이라고 있는데 2000만하고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박덕흠 위원 그 내용을 조정해서 다음에……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지금 댐 건설에 관한 법률 정부 제출안을 보면 기존의 댐 건설의 절차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까다롭게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절차적으로 좀 더 많이 보완을 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4대 강에 사실상 무분별한 댐의 건설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많이 낭비가 됐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은 보완이 될 수 있는 법안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제출안의 내용과 그다음에 박맹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설립·변경 인허가 의제사항이 안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는 댐을 건설할 때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일단 댐 건설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입법으로 과연 이게 필요한 법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어떤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소위원장 민홍철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앞의 정부안과 뒤의 박맹우 의원안하고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 그 내용에 대해서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입장은 댐 건설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입장이고요.

지적하신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정비 허가 및 점용 허가를 의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은 댐 건설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댐 기본계획 고시가 끝난 이후에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추가로 3년 6개월씩 소요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댐이 안 될 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이해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댐을 쉽게 쉽게 지자체장들이 하는 것은 사실 부담도 되지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거하고는 관계가……

○소위원장 민홍철 저는 어떤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댐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환경도 침해하고 이런 측면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이고요.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요.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건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15시55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119쪽입니다.

김도읍 의원안에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시행 및 생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법령 적용에 대해서 타 공익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사업시행자 이주대책 현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토부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에 추가해서 생계 지원을 하는 것은 중복보상이 돼서 다른 보상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개발사업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에서 규정하는 추가적인 대책 수립은 어렵다는 것에 공감은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주대책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는 모두 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계속 이런 법이 올 때마다 형평성 문제 얘기하시고 재원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다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발언으로서 기록에 남기고 싶은 건 어쨌든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공공시설 사업을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다른, 그러니까 비경제적인 요소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 지원을 다른 걸로 마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하지가 않은데 계속 충분하지 않고 앞으로 재원이 나올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우현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미군부대 이전 같은 것 있잖아요. 평택 지원법 이런 것은 지원법이 높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런데 어민이나 농업인들 생계를 위해했던 것에는 너무 지금 적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군기지 이전의 경우에는 미군기지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역사회 전체가 옮겨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현 위원 정말 농민이나 어민들이 영위하던 지역이 친수구역 사업으로 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특히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 조성사업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이우현 위원 그런 경우에 이주비가 너무 적게 나와 가지고 어민·농민들 이주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관련해서 이주 대상자 생계 지원에 대한 현황을 다음 회의까지 국토부 차원에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이우현 위원 특히 어렵게 사시는 농민·어민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국가도 많이 성장된 시점 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든 법을 개정해서 형평에 좀 맞아야 되겠다……

그분들이 1000만 원도 못 받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차관님, 다음 회의 때까지 그런 부분을 대안 좀 마련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이주 대책에 영농보상금이 1인당 한 22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또 주거이전비가 가구당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만 생계지원 차원에서 우선 고용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주거이전을 합니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요, 토지보상비에 추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금은 이 법에 따라서 지급되고요, 추가로 영농보상금과 주거이전비가 지급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저한테 대안 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입니다.

정리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친수구역 사업은 타 사업보다도 개발이익 환수 비율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2.5%를 하는 데 비해서 이 경우에는 90%를 환수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의 명지지구나 국제산업물류도시보다도 보상 내지 주민 지원이 조금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예, 그러세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더 하실 다른……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불법 무허가 건물은 주더라도 이주대책은 정부에서 많이 연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가지고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지금 에코델타시티의 경우에는 무허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단독택지를 감정가에 우선 공급하는 그런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좀 더 그 대책을 세우는 의미에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소위가 진행 중입니다만 20분 정도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민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민홍철 의사일정 제3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페이지 120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데요, 이게 120쪽에서 196쪽까지 됩니다. 그래서 76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드릴 사항이 한 20여 건 되는데 그중에 특히 쟁점 있는 사항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주요 내용하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신상진 의원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사업자의 기반시설 비용을 보조하고 용자자는 내용인데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 개발이익은 전적으로 조합에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도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자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행자부도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3쪽입니다.

민홍철 의원님 안이 전부개정안인데 1번, 전부개정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은 생략하고요.

두 번째가 약간 쟁점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주택정비사업의 유형을 종전의 여섯 가지에서 세 가지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적용 대상의 건축물이나 이런 게 달리해서 규제완화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검토보고에 밑에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통합의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주택 및 복리시설 외에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공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도시기능 회복을 강화하고 제한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취지는 보이는데 정비구역 내 주택, 복리시설 외에 백화점, 아파트형공장 등 이런 건축물이 공급될 경우 주택공급이 감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정의 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문 표현의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수정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128쪽입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한 것은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129쪽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의 일반인 열람도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130쪽입니다.

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토지수요자 등에 입안제안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조합원의 의사를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수정의견으로 두 번째에 있는 내용 중 전부 주민 동의를 받게 하는 것보다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 동의에서 제외할 필요기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32쪽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 시에는 토지소유자

방식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정부가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133쪽입니다.

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에 3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될 경우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취지에 동감하며, 3회 경쟁입찰 유찰 시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2차까지 유찰되면 자동적으로 3회에서도 유찰되기 때문에 2회까지 낮추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인가 이전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방법으로 현행 경쟁입찰 방식 외에 수의계약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사업자를 신속하게 선정해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136쪽입니다.

자녀 분가에 따른 조합원 자격 취득을 명확히 하는 것인데 주요 내용의 네모 박스를 보시면 개정안의 경우에, 밑줄 친 곳에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 즉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에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분가 요건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저희는 조문상에 표현을 명확히 할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139쪽입니다.

대의원 수에 조합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는데 종전에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면서 조합원 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140쪽입니다.

종전에는 총회의 일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14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사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인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예외적인 사례도 감안해서 법률 표현을 일부 보완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사업시행계획수립 동의 요건에 종전에 토지면적에 관한 사항이 없었는데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 요건에 추가시켰습니다.

144쪽입니다.

기부채납 관련해서 주요 내용에 보시면 국토부장관이 정비시설의 기부채납 운영에 관한 기준을 새로 신설해서 마련했는데 검토의견에 보시면 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자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과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45쪽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에 공공주택 건설기준을 준용하고 의제처리 하는 내용인데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의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이것도 관계 행정기관의 인허가 처리에 따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협의 관련 조항을 의제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다만 저희 수정의견은 의제처리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충분한 기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협의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49쪽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시면 정비계획상 이미 존치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면제토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것도 갈등을 해소하고 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150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절차를 도정법에 직접 규정하고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대법원 판례에서 ‘재건축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및 건축물의 매도권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된다거나 매도청구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사이에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를 볼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51쪽입니다.

분양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공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수정의견으로 감정평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서 통지기한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할 필요가 있고,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경우에 분양공고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3쪽입니다.

조합원 재분양 허용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분양신청 완료 후에 전체 세대 수, 주택공급 규모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에 조합원 재분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논란이 됐던 것들을 해소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이지만 저희는 법문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서 일부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155쪽입니다.

미분양자에 대한 손실보상절차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손실보상협의를 이루어 지지 않아 토지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관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시기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8쪽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공급 제한규정에 대한 법문 표현의 명확화를 하려는 것으로 이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159쪽에 주요 내용을 보시면,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정비구역은 자동 해제토록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바람직한 입법 취지로 보았습니다.

161쪽입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시에 대부료를 면제하는 조항인데 행정재산과 동일하게 사업시행자의 부

담을 완화하려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62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정비사업 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64쪽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한 재판상의 화해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 유사 입법례를 인용해서 했는데 수정의견으로 정비사업의 감독주체인 시장·군수에게 조정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군수를 당사자로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위기관인 시도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68쪽입니다.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은 중요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169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자는 내용인데 수정의견으로 지난 2011년 지방세개편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되어 정비기금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을 기금재원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71쪽부터 195쪽까지는 체계 및 자구정비에 관해서 수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196쪽에 전재수 의원안만 한번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도로 무상제공에 관한 법문 표현을 명확화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민홍철 의원님 안에도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신상진 의원안은 개정안 수용 곤란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민홍철 의원님 개정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 개정안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김성태 의원님이 오늘 직접 오셨는데, 의사일정 제40항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것부터 먼저 심의를 하고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16시43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291쪽입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해외 건설인의 날을 제정해서 그동안 해외 건설에 헌신과 노고를 한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하자는 입법 취지이고 또 제정안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서 해외 건설인에 대한 포상 및 단체를 설립하자는 입법 취지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김성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해외 건설인의 날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형식에 있어서는 신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우선 기존 법령을 개정해서 수정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여기 개정을 행자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토론에 앞서서 직접 발의하신 김성태 의원님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국토위 제1소위 법안심사 위원님 여러분들, 온종일 법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해외 건설인의 날 이 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970년도, 80년

도부터 지금까지 약 250여만 명에 달하는 해외 건설인들이 중동사막의, 55도의 열사의 나라에서부터 그리고 영하 40도의 추위까지 이런 해외 건설현장의 그 어려운 현장을 이겨 내면서 오일달러를 벌어서 한국에 송금하고, 한때는 대한민국 외환보유고의 85%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보내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50만 명에 달하는 해외 건설인들이 정말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가족들 보살피고 또 미래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에게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념일 하나 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희망한 부분도 이런 해외 건설인들을 위한 해외 건설인의 날을 제정해서 그 해외 건설인들을 국가가 이렇게 챙기고 또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고 또 해외 건설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취업을 희망하는 해외 건설인들을 위한 협회까지 상당히 희망하고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정부 예산에 해외 건설인의 날을 위해서 3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수시배정으로 아직까지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그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하루빨리 제정이 되어야 기재부에서 그 돈을 수시배정에서 풀어 주겠다는 입장인데 막상 이 법이 이렇게 제출되고 나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개별법으로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예요.

국토교통부는 행안부의 각종 기념일의 날 규정에,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안부의 그런 기념일로 가자는 겁니다. 그 기념일로 가기는 손쉽게 가는데 문제는 주무부처에서 이런 협회라든지 이런 기념일의 날에 포상자라든지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개별법을 가지지 않으면 취약한 구조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점에 관해 가지고 오늘 아침도 국토부랑 협의를 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소위원장 민홍철 말씀 마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 한번 듣고 그다음에 국토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지금 건설단체협회가 있잖아요? 해외건설협회도 거기 총연합회에 들어가 있지 않

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건설단체총연합이요?

○박덕흠 위원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협회들하고도 상의가 돼 있나?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건설정책국장 김형렬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직업군에 대한 협회는 있는데 사람 베이스의 협회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해외건설협회라든지 해외인프라협회라든지 이런 직종에 대한 협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없고요.

○박덕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건설단체총연합회가 있잖아요, 단체들.

○김성태 의원 해외건설, 플랜트협회가 있지요.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단체 연합회 보통 거기서 이견 조율을 해 가지고 국토부라든가 정부에 건의를 하잖아. 각 건설협회들이 모여서 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건설인의 날은 어떻게 돼 있어요? 법정으로 돼 있는 건가? 건설인의 날 뭐 시상하고 이렇게 하잖아?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그것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의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안 들어가 있습니다. 행안부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덕흠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김성태 의원 건설인의 날은 아예 없지요, 아직까지는.

○박덕흠 위원 그런데 건설인의 날 행사하면 대통령도 오시고 다 하던데?

○김성태 의원 그것은 해외건설, 플랜트협회에서……

○박덕흠 위원 아니, 건설인의 날 지정을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행사에는 오시는데……

○박덕흠 위원 거기서 포상도 하고 다 하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것은 그러면 법적 근거 없는 행사예요, 건설인의 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러니까 법에 들어가 있는 행사는 아니고요.

○소위원장 민홍철 이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현 위원 해외 근로자들이 중동에서 70년대부터 고생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공로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발의하셨단 말이에요.

차관님,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또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좀 말씀해 보세요. 이 법안을, 나라를 발전시킨 분들에 대한 것들 해 줘야 될 때가 됐는데 어떤 게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성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외 건설인의 날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다만 추진 방식에 있어는 일차적으로 행자부와 대통령령에다 넣는 것을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식으로든지 해외 건설인의 날이 제정되면 행사라든지 또 관련 단체 설립이라든지 필요한 지원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우현 위원 작년에 예산 3억 우리도 예결위에서 세운 것 같은데, 세웠지요? 그것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수시배정으로 안 풀렸습니다.

○이우현 위원 아직 안 풀렸어요? 쓸 수 있는 예산만 세워 놓으면 뭐해요?

내용 잘 아시잖아요?

○소위원장 민홍철 정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우현 위원 해 봐요. 내용 좀 많이 아는 분들이 해 봐.

○鄭宗燮 위원 이것을 아마 검토할 때 세 가지 봐야 될 겁니다.

하나는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해외 건설인에 대한 정의가 그야말로 과거 그 개념이나,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중동 아니면 앞으로 해외 건설인까지 포함되느냐……

○김성태 의원 계속……

○鄭宗燮 위원 그것은 잘 보셔야 나중에 다툼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건설 일도 있을 거고 제2차 중동도 있다 등등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가 제도상 체계 정합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행자부 규정에 따라서 가는 게 어버

이날, 국군의 날까지 돼 있던 말입니다. 그러면 정당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국군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뭐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논란에 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의병이 아니고 ‘의승의 날도 만들자, 임진왜란 때 승려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온갖 기념일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체계에 맞아야 됩니다. 국가 전체 제도의 체계에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나는 형평성, 이것을 했을 때 혹시나 커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빠졌는데 우리는 따로 독자적으로 날을 만들겠다 하는 여지가 없느냐 그런 부분 한번 잘 챙겨보셔 가지고…… 현장을 해야 될 정당성은 좀 있는데 세 가지 점에서 아마 그것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김성태 의원 그래서 그동안……

○소위원장 민홍철 먼저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전현희 위원 먼저 김성태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특정 분들을 위한 날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건설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공헌하시고 이런 부분 수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형태든지 예우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해외 건설인, 특정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법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이렇다면 어떤 직종이든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은 직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그것도 법률로 해야 한다 이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필요하지요.

그래서 취지를 살리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해외 건설인 예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체계나 그런 것에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은 취지는 살리고 입법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특별히 김성태 의원님 말씀

드릴 게 있습니까?

○김성태 의원 오늘도 이 법 때문에 소위 위원님들이 장시간 협의를…… 그동안 정부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는데 방법은 오늘 우리 소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협의를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행안부의 각종 기념일의 날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고 그 대신 국토부가 이 법률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주시면 이 법을 계류하고 그런 두 트랙으로, 행안부 규정으로써 이 문제 법률 도입 취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입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하고,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참고를 해서 협의하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해외 건설인의 날을 제정하게 되면 이 법에 담으시려고 했던 지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법취지에 맞춰서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하고 이 법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6시59분)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아까 토론을 유보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하나 있는데요, 김성태 의원님처럼 법안 발의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설명을 하시고 나가고 나서 저희가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법안을 발의하신 분을 앞에다 두고 얘기를 하기가……

○**소위원장 민홍철** 통상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법사위에 가서 저도 한번, 있을 때 토론하는 게 오히려……

○**김현아 위원** 토론을 하고 나가시고 나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차관님, 사실 해외 건설인의 날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대로 판단해서 가지고 하셔야 돼요. 다 아시잖아. 건설 체계를 다 아시는데 그 부분을 수용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기 하실 거예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은 국토부에서 잘 검토를 하시라고……

○**박덕흠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김현아 위원님, 도정법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하고 그 뒤에 보면 민간사업에 있어서 기반시설비용 보조하고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나와 있는데요.

정부가 일단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입장을 제기하셨는데 이 법안의 내용 취지를 보시면 정책이주지 등 낙후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업이 아니고요. 이 낙후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이 할 수 있을 정도면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드리는 것은 개정안의 내용이 아니라 원래 현행 법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만 지원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단독’

이라는 말을 빼면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원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민간을 참여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후지역은 절대로 민간 스스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안 제시를 합니다. ‘단독’이라는 것을 빼서 공공과 민간이 합동으로 할 경우에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융자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발의를 요청드리고요. 뒤의 것까지 다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유형 구분인데, 저도 이게 너무 많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많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123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들이 이렇게 구분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거지역에서 하는 거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 개발을 수반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은 공동 사업입니다. 또 가로정비사업은 우리가 소규모 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할 때 너무 도로나 이런 것들을 살리지를 못 하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한나라고 하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을 법안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단순화하는 게 이득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맞춤형 정책을 한다 또 지역별로 세부나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정비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 사업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먼저 선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상업용지나 공업용지에서 하게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에 없다 보니까 중간에 ‘다만’이라고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정비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가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들을 짓는 것을 해 달라고 한 건데 저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주택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점이 많지만 사실은 도시계획상에서 용도순화주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이런 시설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복합 이용을 허용하는데 그것이 원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게 있던 건데 그것을 허물면서 사실은, 그것을 보완하려다 보니까 이게 약간 무

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질문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사업시행인가 전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방법으로 현행 경쟁입찰 방법 외에 수의계약 방법을 추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기업형 임대사업자라는 것은 조합의 소유권을 갖고 들어오는 조합원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일반분양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들어오는 사람인가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 강태석 주택정비과장입니다.

일반분양분을 인수하는 게 기업형 인수……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일반분양분을 인수하겠다고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 강태석 예.

○김현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쟁으로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처음부터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2회 이상 유찰이 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김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시면, 세대원 중에서 직계비속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건데 이게 왜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민법상 성년이 19세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개정이 됐지요, 성년이 19세로.

○김현아 위원 이것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153페이지입니다.

분양신청 완료 후에 전체 세대수, 주택공급 규모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조합원 재분양 허용하는 건데 이것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미 관리처분계획을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다 분양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미한 변경이 생겼는데 그러면 경미한 변경이 생겼을 때는 다시 재분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경미한 변경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상당한

수준의 변경이 생겨서 주택 물량 공급계획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러니까 세대수나 주택 평형이 변경돼서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하는 거지요.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허용 안 되는 거지요, 이 재분양이.

○김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의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은 국토부가 받아들이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수용하는데,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이게 지방소비세 중에서 일정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 후 15년 이상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김현아 위원 그리고 사실 아주 노후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안전진단 비용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안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고…… 이게 소멸성 비용인데 이것을 정부의 어떤 세수입을 갖고 지원을 한다는 것 명분이 있나요? 꼭 이것을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부가 운용 관리하는 자금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해 해서 운용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국토부가 어쨌든 이것을 수정 수용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원하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지자체 권한이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재원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됐으니까 다른 재원까지도……

○김현아 위원 그러면 이게 임의규정인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지원

할 수 있다'입니다.

○**김현아 위원** 저는 됐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일단 신상진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건은 일반적인 낙후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남,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후지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지역개발상 낙후지역이라는 의미가 아니…… 성장촉진지역이나 그런 데 있는 낙후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의 근거가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19대……

○**소위원장 민홍철** 이 부분은 지금 수용을 안하신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수용 안 하는데……

○**소위원장 민홍철** 수용 안하신 거지요? 다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김현아 위원님께서 수용을 하는 쪽으로 재고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김현아 위원** 아니, 제가 성남은 잘 모르겠고 부산의 정책이주지를 가 보니까 저희가 몇 단계의 규제 완화로 풀어서 여기를 양성화해 주고 하면서, 개·보수를 허용해 주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단독주택인데 건폐율이 90%고요, 용적률이 한 400%가 넘게 나와요. 그래 가지고 여기는 제가 보니까 아예 자력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 사업에 민간이 들어와서 지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할 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대에서 이미 그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와 융자를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월 달에 개정이 시행됐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특별히 달라진 게 없

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정리한 내용을 존중하는 게 맞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19대 때 신설된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19대에서 발의해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 진행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다음에 김현아 위원님께서 본질적인 질문을 주셔서 가지고, 저희가 이 정비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일종의 큰 결정을 내린 것은 재정비사업이 성격과 규모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법으로 규율하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작은 것은 간소화하는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아있는 것을 도정법에 두면서, 이 법에 두면서 세가지로 재분류를 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용역을 했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담아도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래서 결국은 걱정하시는 게 이 안에 주택이 정책 의도대로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염려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사업한 것들을 보면 그래도 제일 수익이 나는 게 주택이기 때문에, 76%가 지금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용도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이 구상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다른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주택이 안 지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본연의 상업·업무나 공업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목적과 저희가 주택만을 대상을 하는 재개발사업이 같은 법 테두리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겠냐는 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하나의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

로 깔고 있는 용도지역의 성격이라든가 입지의 성격에 따라서 주택 중심의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상업이나 업무, 주거가 혼재된 형태의 재개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재된 개발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현행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격 그것들을 계속 견제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용역결과서 보내 주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소위원장 민홍철** 토론해 주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38.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39.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17시16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안, 제38항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제39항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유인물 197쪽입니다.

이 3건의 법안에 대한 의견은 198쪽부터 289쪽까지 약 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8쪽입니다.

법안의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회부 법안 및 병합심사와 관련해서 정운천 의원안, 이춘석 의원안, 이현승 의원안 각각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현승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통합하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0쪽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법안 주요내용 비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제명, 목적 및 정의와 관련해서 법의 제명을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으로 하고 법의 목적 및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검토할 사항으로, 첫 번째 법률 제명을 빈집 정비사업 위주로 부여함으로써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내용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사업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빈집을 6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 1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년으로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법문 표현의 모호한 측면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조항별로 다 검토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이 법의 전반적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검토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도 전문위원께서 검토했으니까요, 잠깐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원욱 위원** 아니, 이것 축조 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한 5분 내지 10분이면 됩니다.

○**이원욱 위원** 아, 그 정도?

○**소위원장 민홍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206쪽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농어촌 지역의 빈집 정비사업 및 주택개량은 농어촌정비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는 제정안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농어촌 지역은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고, 또한 이현승 의원안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총칙이 아닌 본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빈집 실태 및 정비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가 의견 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의가 없을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현아 위원** 잠깐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소위원장 민홍철** 보고 끝나고요, 이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그다음에 212쪽, 빈집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규정은 일반적인 법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문의 위치를 보칙에 규정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빈집 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관련해서도……

○**소위원장 민홍철** 215페이지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예, 215페이지.

저희가 보완할 사항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225쪽입니다.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인데 수정의견으로 소유자가 빈집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보상비를 받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비용을 제외한 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구 수정 내용입니다.

다음에 229쪽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해서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 수용을 허용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공익성에 대한 기여도 등 입법취지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않고서는 개별법에서 토지 수용 조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게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30쪽,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타당하다고 보고 기초지자체장보다는 시·도지사가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232쪽, 시장·군수가 신탁업자를 사

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주택의 경우는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탁업자 지정은 제정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35쪽입니다.

주민합의체의 구성과 관련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구성요건에 관한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완할 사항들을 저희가 이 법문에 다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238쪽입니다.

시공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 보완할 사항으로 첫째, 시공사는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사가 입찰을 꺼려하여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조문의 간결화를 위해서 일부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구요.

셋째, 조합임원의 준수사항은 일반적인 법제 규정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본칙이 아닌 보칙에 조문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통합 심의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다만 용도지역 및 용적률 등 도시·군계획에 의한 개발행위를 시·군·구가 결정하는 경우 공공기반시설 부족 및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과 관련해서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일부 자구수정한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248쪽입니다.

빈집 정비에 관한 보조 및 융자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재정적인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일부 사업은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하고, 정비기구 및 임대관리 지원 업무는 다른 임대주택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49쪽의 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조세 감면과 관련해서 두 번째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세감면

특례를 정하지 않고서는 이 개별법에서 특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정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50쪽의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난개발의 우려로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근린재생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므로 건축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둘째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 주택 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53쪽입니다.

시장·군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술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자체의 지원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사항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하고, 나머지 조문 나열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55쪽부터 289쪽까지는 체계나 자구정비와 관련해서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먼저 아까 이원욱 위원님께서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양해하신다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여러 유형과 규모의 사업을 하나로 규율하던 것을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집주인들이 노후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사업들을 여기 소규모 정비사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를 여기다가 같이 묶은 이유는 빈집이 방치될 경우에 안전이나 또 범죄 발생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법을 제정하게 됐고, 참고로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이런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법과 지원체계를 최근에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이원승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제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박덕흠 위원 몇 쪽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206쪽입니다.

206쪽에서 이원승 의원안을 보시면 ‘이 법은 빈집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농어촌정비법상 적용되는 농어촌지역 등의 빈집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어촌에 정비가 필요한 빈집들이 많이 있다는 게 저희 인식이고 그래서 저희는 농림부와 같이하려고 노력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따로 하더라도 빈집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각각 시행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합적인 빈집정보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중에서 229페이지, 제10조 토지 수용에 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에게 수용권을 허용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제41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금 지방세 감면 관련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 발의 의원인 이원승 의원께서 지금 이런 취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40조는 정부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의견 내신 것처럼 기재부에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국가의 보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외국의 입법을 보더라도 용자와 출자에 대한 근거는 법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 자리에 기획재정부의 최재영 국토교통예산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예.

○소위원장 민홍철 의견을 말씀 듣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기재부

입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령화나 도시 노후화 때문에 지금 빈집을 정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현승 의원님이 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빈집 정비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 원칙이고 사실 국가나 공공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지자체의 사무거든요. 기본적으로 작은 단위고 공공적 사무의 일부로 봐야 된다는 점이라서, 지금 이 빈집 같은 법을 보더라도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사라든지 정비계획이라든지 지원을 다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저희 국토부와 기재부가 실무차원에서 이 재정 지원에 대해서 사실 협의를 해 왔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아직 빈집 정비 대상 규모라든지 예상되는 재원 소요라든지 또 재정을 어떻게, 국비를 얼마나 넣을 건지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공감대나 실무 협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정지원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제가 이 법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갔는데 아까 소규모 주택정비를 이리로 빼 오면서, 보니까 제가 이 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 사실은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것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빈집이 농촌에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농어촌정비법을 관할하는 담당 부서는 이것을 관할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서는 통계를 각 지자체가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광역시·도 얘기 하셨는데 저는 초기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는 국토부가 해서 이 빈집 실태에 대한 어떤 표준안을 제시하고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지 이것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하면 실태조사부터 가지각색이고 하나도 정비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농어촌정비법의 것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차관님께서 그게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 수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은 국토부가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규모 주택정비하고 합치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빈집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래 도정법에 갖고 있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 법에서 주다 보면 필요 이상의 혜택이나 어떤 토지 수용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대안 검토를 더 해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빈집 정비에 대해서 과도한 수용권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소규모 주택정비를 할 때에는 사실은 그런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정법에서 준 권한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받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저도 국토부하고 마찬가지로 어쨌든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넣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실행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연결해서 국토부에서 좀 수정하시기를 바라는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뿐만이 아니고 이런 빈집에 대한 것도 기금에서 조금 뭔가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영해서 당장 정부 재정에서는 가지 않지만 일단 기금에서 먼저 필요하면 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병행하면 기재부는 당장 부담은 없지만 명분은 살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의견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에 정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鄭宗燮 위원 저도 이번에 검토하면서 처음 발견한 건데,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행위가 어디에 해당되니까, 그게 소유권 침해인데? 행정상 철거하는 행위가 지금 헌법에 따르면 재산 사용·수용·제한 이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정당한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이 완전보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번 우리 법만 아니라 농어촌정비법하고 건축법에 들어와 있다는데 이것부터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위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용부터 먼저 하고, 일단 수용한 다음에 그걸 철거하든지 말든지는 관계없는데 이게 그런 것 없이 지금 사용·수용·제한 어디에도 해당 안 되는 유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바로 한다? 이게 내가 볼 때 우선은 위험법률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빈집문제는 농어촌이든 도시든 간에, 도시에도 지금 도시 슬럼화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무슨 농림부가 하느니 국토부가 하느니 이래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통합하는 어떤 법리체계부터 먼저 정돈하는 게 이번에 검토해 보니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부처 기준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보지 말고 이에 대한 법리체계부터 먼저 세워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집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듬는 게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우선은 지금 헌법적으로 이게 허용될 수 있는 건가부터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민홍철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수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수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빈집 철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 동의를 거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철거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텐데 그것은 다른 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준용합니다.

○鄭宗燮 위원 아니, 다른 법을 준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법도 지금 문제가 생긴대요, 이번에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직권 철거라는 행위가, 이 행정상 행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고, 지금 헌법 23조 3항 외에는 허용하는 게 없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우선 이 문제부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검토는 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직권 철거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거를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규정된 공익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직권 철거를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일본의 경우도 말씀드렸습시다라는 상태가 나쁜 빈집이 물리게 되면 그 지역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안전사고나 화재 혹은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의 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경우에도 지적하신 것처럼 명백한 공익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직권 철거를 허용하고 반드시 보상을 정당하게 하도록 그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아마 도시나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일단 이 법은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정법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위험 소지, 물론 국토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위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또 재정투자의 근거라든지 필요성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소규모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시행자 부담이 원칙이고 또 지자체 사무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라든지 좀 더 전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해서 의논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청회를 우리 위원회 차원이나 의원실 차원에서 개최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박덕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덕흠 위원 저도 안의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빈집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13만 인구가 지금 한 3만 인구로 줄어버리니까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들이 보면 전부 다 도시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집들을 건들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누가 와서 산다고 그래도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허물어져 가는 집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수리비를 보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안 건드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외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농림부에서도 어떻게 됐든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좀 더 해서, 위원님들도 다 협의를 해서 논의해 보자는 취지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제정법이고 또 기재부하고도 지금 의견이 일치가 안 돼 있고요, 농림부하고도 이견이 있고 그래서……

○이원욱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민홍철 추가로 뭐 하실……

○이원욱 위원 예.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말씀 먼저 하시고요.

○이원욱 위원 차관님, 저는 근원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이 법을 도정법에서 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보완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법을 자꾸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한 법에 담는 게 법체계상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빈집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빈집만 떼어 놓고, 지금 빈집은 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직 용역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상태지요? 그것 실태조사 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실태조사 이제 해야지요.

○이원욱 위원 거 봐요. 지금 실태조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덜렁 제정법을 만들자……

그러니까 첫 번째,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된 내용을 도정법에서 별도 법으로 빼야 되는 이유가 뭔지, 두 번째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법안을 당장 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도정법에는 규모가 큰 사업과 작은 사업 등 성격이 다른 사업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작은 규모로 절차를 단순화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해 냈고, 거기에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같이 묶어서 하기로 틀을 바꾼 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실태조사는 지금 사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빈집의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고, 정비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그것을 이 법안에 담고자 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위 차원의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현승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이번에 제정법 안에다가 많이 담았습니다. 철거보상에 관한 이슈도 거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무리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상적으로는 농림부와 같이 가는 게 좋고, 최소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라도 협의를 해서 같은 포맷으로 모든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법에 놓어준 주택까지를 포괄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제정을 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기재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공공성이 있기는 하지만 보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의 시각을 존중해서 보조는 빼고 용자와 출자에 근거를 두는 정도로 해서 일단 이 제정법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의를 제기하시고, 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정법이고, 또 기재부나 농림부에서도 의견이 합치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위원회 차원이나 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 결론을 내리시지요.

그게 낫겠지요?

○김현아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법이 미뤄지면 저희가 아까 도정법에서 재정비사업 유형 구분하는 것도 늦춰지는 건가요?

○소위원장 민홍철 도정법하고는 관계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아 위원 아니지요. 관계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게 이제 같은 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도정법은 통과시키더라도 공청회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는 전체회의에서 계류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절차를 거쳐 주면 되니까요.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도정법 안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빼는 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만들어 낸 데에 소규모사업이 들어가면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만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나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빼내는 데는 찬성하는데 이것을 꼭 빈집하고 붙여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연의 빈집의 실태라든지 이용, 그다음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것으로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소규모 주택정비를 가져오게 되면 이게 관리계획인지 개발에 관한 법인지, 이게 섞이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논란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원욱 위원 제 생각은 법체계상, 그러니까 절을 하나 신설하든지 등등 해 가지고 소규모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도정법에다가 담자는 거예요. 그리고 빈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 놔야지, 법이 지금 이상한 짜집기 법이 돼 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비와 관련된 것은 일반법으로 해 가지고 도정법에다가 다 담고, 소규모 정비가 필요하 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 절이라든지 한 장이라든지, 도정법의 법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한 장으로 해 가지고 담아내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김현아 위원 지금도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건 조금……

○소위원장 민홍철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의하기는 너무 어렵고,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더 논의하시고 만약에 도정법과 관련이 있고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계류시키는 방법을 거치는 게 논의의 편의상 맞다 봅니다.

○이원욱 위원 예,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이 법안은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또 의견을 더 수렴하는 차원에서 계속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데 도정법 개정안은 통과된 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아니, 패키지인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패키지인데 그게 그렇게 되면 지금 두 법이 다 묶여 가지고……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현행법은 계속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도정법은 그대로 가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상태에서 이 빈집 관련된 특별법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같이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논의해 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요, 그 이후에 말씀을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차관님, 분법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같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소위원장 민홍철 분법어요? 그러니까 전체회의에, 상임위에 계류돼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지금 차관님은 도정법만 올려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회의에 상정 안 해도,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데 도정법이 전체회의에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예, 가는 것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게 전체회의에서 계류하는 걸로 하고 빈집 정비 특별법은 절차를 이행해서 소위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이원욱 위원 아니, 그게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소위원장 민홍철 관계는 없습니다.

○이원욱 위원 다른 주택 어떻게 하려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이원욱 위원 저는 법체계가, 지금 같이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시 소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이것은 패키지 법인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 그것은 소위에서 일단……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차관님이 여기를 통과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했다는 것에 집착을 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어요. 그 얘기는 빈집법도 빨리 해서 같이 올려 줬으면 하는 의도는 이해하는데 조금 기다려 보시지요. 그것은 전체회의든 소위든 계류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절차에 맞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위원** 가급적 빨리 진행하자고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제39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7시51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유인물 294쪽입니다.

윤관석 의원님께서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해서 수출을 허용하자는 내용인데, 저희는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했는데 국토교통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윤관석 의원님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재생된 건설기계 부품의 품질 신뢰 확보 방안, 성능미달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유통 등의 사유로 본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 시행 이전에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의 논의를 거쳐서 안전기준 및 제재방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중고자동차 수출하

는 것과 평행해서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수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낸 것은 일단 지금은 수출이 안 되면 완전히 파쇄를 해서 유통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게 될 경우 일부 건설기계 부품들이 유통될 경우에 그 성능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자동차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생된 건설기계 부품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또 성능이 미달되는 기계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하고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옳겠다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일단 연구용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건설기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기준이나 성능기준을 만들려면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기준이나 성능기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다시 심의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윤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는 한데, 안전기준이나 무분별한 유통, 단속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업의 수출 여부에 따른 사후신고제도 등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되기는 한데…… 이게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건설기계가 종류도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게 안 해 본 분야이긴 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준비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나 또는 아예 과정을 달리해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제기하신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제가 실무자한테 했고요. 실무진에서는 안전기준과 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항목별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필요성을 확실하게 공감하고 있고 이러한 보완조치를 마련한 후에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선후가

정지작업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윤관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은 어떻든 간에 보완작업을 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건데 용역을 한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먼저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계획을 정부 측에서 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24일 날 한 번 해 주시고.

○소위원장 민홍철 24일 날 소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제출을……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 전에……

○윤관석 위원 그 전에 제출해 주시고 24일에 그것을 계속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차관님, 건설기계나 자동차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박덕흠 위원 어차피 건설기계도 부품 없으면 안 돌아가고 자동차도 부품 없으면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수출하는 것을 갖다가 안전이라든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요.

○박덕흠 위원 자동차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플러스되는 요인인데 이런 것은 빨리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성 뭐 이렇게 따지시는데 그런 것보다 어차피 건설기계도 중고도 돌아가야만 수출할 수 있는 거지 안 돌아가는 것을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 과정에서 재생해서 유통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인데요, 자동차는

안전기준과 성능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덕흠 위원 그런 것을 빨리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관석 위원 빨리 그 보완계획을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래서 저희가 실행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리고 산업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셨나요?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장 이병훈 산업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인력기재과장입니다.

산업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똑같은 의견인데요, 품질신뢰 확보방안이나 성능미달 건설기계 유통 시 제재방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보완책이 선행된 이후에 이 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관석 위원 보완책 실행방안을 주셔서 빨리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 보완책 관련해 가지고 검토한 내용을 우리가 24일 날 또 소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4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17시58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함

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296쪽, 이우현 의원안 전부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0쪽, 시설물에 대한 정의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시설을 3종 시설물로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1종 및 2종 시설물의 종류를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시했구요.

303쪽, 민간 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한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다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봤습니다.

304쪽,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봤고요.

305쪽, 사법경찰관 관련 조항을 신설했는데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위반 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을 부여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07쪽, 긴급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의무 부여와 관련해서 주민대피 등의 적극적인 안전조치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309쪽, 시설물에 중대결함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위험표지의 설치는 당연한 입법조치로 보았고요.

310쪽,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의 현황 및 실적을 공개하는 것, 이것도 타당한 입법조치이고.

311쪽, SOC 시설물의 성능평가제도 도입도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내용이고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312쪽, 국토부장관이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을 제정해서 고시하는 내용을 신설한 내용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313쪽,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추가한 것은 시설공단의 전문적인 인력이나 기관의 특성상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실태점검 실시 의무화 이것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315쪽의 정부안 중에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불법하도급 관

행을 근절하는 취지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316쪽,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입법례도 대부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317쪽, 하도급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한 것도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318쪽,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회의 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5조의 국고보조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이 ‘포괄적인 지원’으로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시면 제가 조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부개정안 제15조에 “국고보조”라는 제목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수정요구안은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내용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인력지원일 수도 있고 비용지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수정을 요청했고 그래서 기재부와 그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까?

정중섭 위원님.

○鄭宗燮 위원 눈에 띄는 게 거기에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E등급이 월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D·E등급 연 2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 쪽의 규제는 필요한 규제인데 물론 마찬

가지로 과잉규제는 또 안 되겠지만 E등급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푸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타당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오진수 건설안전과의 담당 사무관 오진수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오진수 재난법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담당을 했었는데요, 시특법으로 들어오면서 전문기술자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시기를 단축해서 하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鄭宗燮 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기본적으로 점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했으니까 월 2회씩 해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지금은 안전점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니까 연 2회로 풀어도 관계없다 이러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가 안전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들이 예민한 부분인데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 놔도 관계없어요? D등급하고 E등급하고 다 연 2회 이상, 그것은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느슨하네요. 월 2회가 갑자기 연 2회로……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 기술안전정책관입니다.

중전에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그냥 육안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시설들을 3종으로 편입하면서 건설기술자에 의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종·2종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과 같이 점검서식이라든가 기준을 가지고 중전과는 달리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저도 보니까 아무리 일반 공무원들께서 점검한다 해서 월 2회 점검하다가 1년에 두 번 이상으로 하는 것은 글썽요, 그게 갑자기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김현아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원래 1·2·3종……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요, 잠깐…… 제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김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합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되는지 그것은 좀 의문이고요. 최소한 월 2회에서 두 달에 한번이라든지 분기당 2회라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

는데 갑자기 월 2회에서 연 2회면 10분의 1로 줄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리 전문가가 하더라도.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 점검주기는요, 지금 여기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을 저희가……

○소위원장 민홍철 특히 D등급·E등급이잖아요.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 가지고 시행령에서 정할 때 그 사항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법안에는 연 2회 이상 해 놓고 시행령에다가……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 그래서 횟수를 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최소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가 법에서 최소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1년에 2회 이상이라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2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리고 아까 15조, 기재부 요구에 의해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보조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비용은 지원을 안 해 주겠다라는 의지가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국토부의 최초 의견은 국고보조를 해 주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또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그냥 필요한 지원으로 바꾼 이유는 국고는 지원 안 해 주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수용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용한다는 의미는 저희는 보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사실은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런 위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할 때 또 기재부하고 엄청난 씨름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래서 결국은 여

기에 넣어 놔도,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예산 당국이 예산을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고 여기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산 배정이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아까……

○김현아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4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4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4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

4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8시11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5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페이지 320쪽입니다.

이찬열 의원안인데요, 주요 건설자재 원산지·제조자 표시 의무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321쪽의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 등 미표기 시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322쪽입니다. 정동영 의원안하고 이학영 의원안인데요. 직접시공 대상 공사를 정동영 의원안

에서는 100억 원 이상 공사 30% 이상 그다음에 이학영 의원안은 전체 공사의 20% 이상씩 직접시공을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기술해 놔지만 노동계하고 종합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협회 등등 의견 차이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24쪽, 정종섭 의원안입니다.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소위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박덕흠 위원님도 대체토론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이게 도입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관석 의원안에서 직접시공 실적을 평가해서 공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하고 전문건설협회에서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위원님은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율이 낮아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업계의 갈등으로 조속한 추진이 어렵다면 시공능력 평가에 직접시공 항목을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늘려 가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찬열 의원 개정안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정동영 의원님과 이학영 의원님 개정안은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종섭 의원님 개정안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님 개정안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우선 이찬열 의원님 개정안 보면 주요 건설자재 원산지·제조자 표시 의무화 이것은 대체토론에서도 제가 얘기가 있었습시다라는 이게 우리가 품질 확보하고 또 부실시공 그런 방안에 대해서 건설진흥법 개별법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표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에게 떠넘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표기를 하는 것이 다 만사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자재를 철근이다, 원산지 중국, 우리나라 것 이렇게 할 때에 보면 그것만 갖다 붙이면 돼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유통구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수입 유통의 문제이지 건설업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업자들에게 이걸 표기를, 단속책임을 소비자인 건설업자에게 떠넘기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법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윤관석 위원 앞에서부터 검토하는 건가요?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요, 그냥 신청한 순대로 하는 거예요.

○박덕흠 위원 저……

○소위원장 민홍철 아, 아직 안 끝나셨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것 건설자재 우선 하는 거지요.

○김현아 위원 거기 건설자재 제가 잠깐만 추가 설명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민홍철 예.

○김현아 위원 제가 봤을 때 준공도면이나 이런 데 자재에 원산지 다 표시되지요? 준공도면이나 이런 데 다 나오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김현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건설현장 하고 완공된 시설물 공사관련 정보에 집어넣는 건데 이게 겹으로 보면 소비자의 알권리 해서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는 철근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근이 85%가 국내산이고 한 15% 정도가 중국산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철근이 굉장히 품질이 낮고 썩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바꾸어 말하면 국내 업체가 85%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산을 들여오면 소비자들의 인식이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해서 이걸 꺼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철강업체 가격 경쟁력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독과점 구조 자체를 고착화시켜 주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소비자의 알권리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감안하고 이걸 할 필요가 있지만 이 정도 표시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한테 뭔가 그렇게 알권리를 침해하는 건가, 왜냐하면 준공도면이나 이런 데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약간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욱 위원 저는 도입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정부 측 의견에 나왔듯이 소비자의 알권리 이런 문제도 있고,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유독 왜 건자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약간 다른 측면인데 FTA가 실시되거나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중국에 수출할 때 비관세장벽에 의해 가지고 수출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가의 품질 낮은 철강이 한국에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 이것을 이런 식으로라도 규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그나마 활력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알권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아주 큰 명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철강산업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김현아 위원 잠깐 반론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이것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준공도면에 다 나와 있는데 건물 현장 앞에 이걸 표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니까 사실 알권리의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철강산업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자, 그런데 독과점을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비자들이 중국산을 국산보다 싸게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소비자들이 이게…… 우리 그렇잖아요, 괜히 중국산이라고 하면 약간 폄하하는 그런 게 있어서 결국 중국산을 꺼려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말씀, 지금도 85%가 국산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 정도 중국에서 들여와서 약간 가격 경쟁을 일으키는 정도의 견제인데, 이게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비자를 보호하고 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보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여기서 규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원욱 위원 이걸 소비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중간 건설업자의 이익이 줄어드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철강을 쓴다고 해서 과연 가격을 내리고 있는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지요, 실제로.

○김현아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있지요. 중국산 아니고 다 국산을 써요. 그러면 원가가 높아지잖아요. 원가가 높아질 것 아니에요?

○이원욱 위원 중국산 철골을 쓰는 아파트와 한국산 철근을 쓰는 아파트가……

○소위원장 민홍철 그렇게 바로 반론하는 게 아니고요……

○김현아 위원 원가가 높아지겠지요.

○이원욱 위원 가격이 똑같지요, 지금 현재?

○김현아 위원 가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원가가 높아지지요, 공사 원가가.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십니까?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먼젓번에도 1종, 3종 단열재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갖다가 딱지만 붙이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둑질을 자꾸만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됐든 시공하는 사람이싼 가격에, KS 제품은 똑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 시공시키는 도급자는 일단 중국산하면 또 외국산 나쁜 거라고 인식이 돼 가지고 그걸 안 받아 준다

는 애기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걸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은 중국산, 이렇게 다 붙이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유통 과정에서 이걸 표기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꼭 현장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애기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또 이원욱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이원욱 위원 최초에 설계비를 책정할 때 국산 자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계비를 책정하지요, 공사 시공단가를 책정할 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건설정책국장입니다.

국산, 중국산 그런 구별은 없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가 정보에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성능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원욱 위원 그러면 물가 정보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시공비를 책정하지 않나요, 처음에? 그것은 국산의 KS 제품을 기준으로 하겠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설계 단가를 책정할 때 가격은 보통 LH공사나 이런 데서 할 때 조달청 조달단가를 하는데 조달청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내 철강제조사에 한 11개 회사와 계약을 해서 국내 철강·철근 가격으로 단가를 정합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양가가 산정되겠지요, 아파트를 예를 든다면?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일단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100으로 해서 설계단가고 건설업체들이 들어갈 때는 낙찰 차이만큼은 내려가는 거니까……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중국산을 쓴다고 해 가지고 분양원가라든가 건설원가라든가 이것이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정중섭 위원님.

○鄭宗燮 위원 이 입법의 목적이 지금 부실시공을 막자 이게 입법의 목적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鄭宗燮 위원 그러면 다른 것 검토할 필요가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부설시공을 막으려고 하면 설계도면에 국산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국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설계도면하고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다르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자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입법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수단이 뭐냐 이런 걸 봤을 때 목적하고 수단하고 맞아야 되는 거지 목적하고 수단이 안 맞는 얘기를 어긋나게 하면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법목적은 원산지 표시해서 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건설자재도. 그런데 철근만 자꾸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스콘도 있고 바닷모래도 있고 부순골재 이런 게 다 있는데.

현재 건설자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KS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원산지 표시가 안 됩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질문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현재 건설자재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KS 인증을 하면서 품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산이면 거의 다 인증이 될 건데 또다시 건설업체나 이런, 아직까지 이게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해 주는 건 참 좋은데 그게 또 개정안에는 보니까 그걸 위반했을 때는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벌규정이 없네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김현아 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있습니까? 아, 있네요. 있는데, 그래서 또 특히 논의가 여기서 좀 더 의견을 들어 보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정부의 입장에서 이거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게 사실은 19대에도 비슷한 입법이 발의가 됐고 이런 논쟁 끝에 폐기가 됐는데요.

지금 저희의 문제의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KS 하도록 장치를 여기저기 걸어 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산지 둔갑이라는 표현을 씁

니다만 하여튼 이런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현장에서 제대로 된, 품질이 검증된 자재를 써 가지고 안전품질 시공을 하라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미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가 수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통단계에서도 관리를 강화해야 되지만 사용단계에서도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고.

알권리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산 철강에 품질 문제가 없다면 그걸 입증해서 여기 중국산 철강이 들어갔다고 해도 마케팅을 해서 팔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걸 안 한 것이 그러면 결국은 사실은 중국산인데도 한국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이 됐다, 그걸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장치는 장치대로 이행을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도 제대로 된 품질의 자재를 쓰도록 하는 책임을 나눠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잠깐만……

○소위원장 민홍철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저는 뒤에 처벌조항을 두는 것은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건물 앞에 머릿돌에다가 자재를 표시하는 것하고 제대로 쓰는 걸 규명하는 일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공도면에 이미 원산지를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처벌조항을 하는 거나 이런 중간단계는 있다고 보는데, 뒤에 것은 찬성, 그런데 앞에 이것을, 이미 준공도면에 다 원산지를 표기하게 돼 있는 걸 다시 별도의 건축현장, 현장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준공되고 나서 그걸 표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어가서 매번 점검해 가지고 확인을 하나요? 이 앞에 부분이 저는 과도한 이중규제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박덕흠 위원 그러면 차관님, 이게 중국산은 안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KS 제품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지요. 당당하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당하게 쓰는데 그 부분을 왜 건설업자들에게 표기하라 그래요?

유통과정 거기서 표기를 하면 되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유통과정에서도 하는데……

○박덕흠 위원 거기 파는 사람들이 중국산, 국산 표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유통단계에서도 표시를 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사용단계에서도……

○박덕흠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감리가 또 있잖아요, 감리가. 공사현장에 꼭 감리가 있잖아요, 감독하는 사람이. 지금은 철근 딱 베고 나면 감리가 와서 그것 다 오케이 안 하면 레미콘 못 쳐요. 그런 정도로까지 가는데 자꾸만 규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가……

○소위원장 민홍철 답변하시지요. 차관님 말씀 듣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가 이견 논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제도가 작동하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된 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박덕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게 다 작동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은 이런 원산지 위반행위로 인해서 적발되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부가 이걸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원욱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원욱 위원 아니, 저희가 밥 먹을 때 식당에 가면 어떨 때 중국산 김치 써 있고 미국산 쌀 써 있고요. 그래도 당당하게 쓰고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라고 하는 것 써 있어도, 처음에는 광우병 때문에 다 죽는다고 생각해서 안 샀지만 지금 당당하게 써놓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옷도, 지금 입고 계시는 모든 옷에 어느 나라에서 생산됐다고 하는 것이 다 써 있는데 왜 유독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다음에 사용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산이라고 쓰고 그리고 당당하게 집을 팔자라고 하는 거지요, 건물도 팔고.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어떻게……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덕흠 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 옷이 'Made in Korea'라고 했을 때, USA든 여기 속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중국산이라고 붙입니까? 똑같은 현상이예요. 왜냐하면 유통할 때 표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산, 중국산이라고 명찰을 다는 거나 마찬가지로는 얘기에요, 시공할 때, 거기 현장에 그렇게 하는 자체가. 그것은 비유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업계 간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鄭宗燮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소위원장 민홍철 정종섭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鄭宗燮 위원 규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중규제가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약을 단속할 때 마약 만드는 사람만 확실하게 처벌하면 되지 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하냐, 아예 생산 안 해 버리면 사용 안 하는데, 이렇게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생산하는 사람도 통제를 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도 통제하고 유통하는 사람도 통제하고 모든 단계마다 통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봤을 때 레미콘, 아스콘,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강도가 안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게 부실시공, 잘못된 재료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을 하면 정확한 강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공급자만 통제해서 효과가 없으니까 그다음 단계에서 사용하는 단계까지 전부 통제를 해야 이게 부실시공을 최소한 막을 수 있다 이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으로서 이것 왜 논란해야 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개정안 자체가 체계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뭐든지 투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해야지 왜 이걸 자꾸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윤관석 위원 발언 안 해 갖고 한마디만……

○소위원장 민홍철 윤관석 위원님.

○윤관석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담이나 어려움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부 측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추세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내진설계를 법령상 의무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실제로 내진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할 방법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통단계에서 건설자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그대로 건설현장에서 적용이 됐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하는 절차나 방법은 필요하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렵사리 수용을 한 만큼 또 이게 지금 건축물 자체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물, 공사 관련 현황정보에 이걸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금……

○박덕흠 위원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우리 소위원회가 그동안 관례대로 만장일치로 해 왔습니다, 19대 때도 그랬고요. 참 이렇게 의견이 갈리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원산지 표시하고 부설시공을 막기 위한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마 업계에서도 뭔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대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요. 그런 부분도 좀 더 확인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소비자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 오늘……

○박덕흠 위원 좀 보류를 하시지요. 보류하고 시간을 갖고……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정부의 의견은 변함이 없을 거니까요. 좀 더 내용을, 방법이 있으면 하고 24일 날 또 소위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의결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지금 의견은 다 들으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리시지요.

그러면 또 다음 있지요?

그다음에 45항 같이해야 되잖아요?

45항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직접시공의 확대.

○박덕흠 위원 잠깐만요.

직접시공 문제 이 부분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시공이라는 것이 지금 정동영 의원안 보면 100억 원 이상 공사 30%, 이학영 의원안은 전체 공사 20%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공사 수주물량이 일정한 물량을 수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번 입찰을 봐서 공사를 수주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든 대형건설업체든 간에 만약 1000억짜리 공사에 30%면 300억이거든요. 직접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직원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직원을 채용했다가 그다음에 공사물량이 떨어진다고 하면 직원을 유지시키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단계구조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참제가 폐지돼 가지고서 지금도 음성적으로 시참제를 활용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게 종합건설업체에서 직접시공을 한다 하면 그런 부분이 더 음성적으로 양산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 업체들이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논의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정동영 의원님께서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전문건설협회와 협회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업계에서 그러니까 전문건설협회가 원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와 직접시공 확대방안을 결합하는 수정 법률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계속심사로 보류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존중을 해주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원욱 위원 24일 날 하지요.

○박덕흠 위원 보류하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보류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마지막에 정종섭 의원님 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윤관석 의원님 안도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먼저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아니요, 남아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정종섭 의원님 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체들도 삼진아웃제 강화 약속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현행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받을 경우에 건설업 등록 말소를 하게 되는데 이게 기간 제한 없이 3회로 갑자기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너무, 기간 제한이 없는 게 다른 입법사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과도한 건지 아니면 다른 입법사례가 있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이게 면책조항이 있나요? 지금 면책조항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따로 없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면책조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간 제한 없이 그냥 삼진아웃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의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입법사례하고의 유사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鄭宗燮 위원 이번에 제가 이 안을 낸 것이 어쨌든 지금 입찰담합 뿌리를 안 뽑으면 건설업계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입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언뜻 보면 입법인데 그게 전혀 입법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게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우리가 멍텅구리 입법, 바보 입법 그러지요.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것은 아예 위법한 입법이니깐 그렇고 이게 멍텅구리 입법의 전형적인 형태인데 겉으로 보면 등록말소제도라는 아주 강한 제도가 있는 척 하면서, 지금 기간 제한을 두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3년에 두 번 그러면 한 번 위반돼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처분할 때까지 대략 한 2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다음에 3년 안에서 두 번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에서.

그래서 이것은 해 봐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그런 방식이라서 뭐 앞으로 기간을 늘리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자세히 보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작동 안 하는 그런 장치는 아무리 해 봐도 그것은 멍텅구리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을 가지려고 하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기간 제한 없이 그냥 삼진아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효성은 똑같이 확보를 하는데 이런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번 짚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실효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의료법상에 의사들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를 3회 받으면 삼진아웃이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평생 한 번이라도 만약에 자격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세 번이 되면 삼진아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별로 과도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삼진아웃을 당하고 그 건설회사가 업체를 폐쇄하고 똑같은, 그대로 하면서 이름만 바꿔서 새로 건설업을 등록해서 하는 이 부분을 오히려 규제를 하고 뭔가 보완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삼진아웃제도는 아까 의사나 이런 부분, 개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건설이라는 부분은, 작은 회사들은 지금 우리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담합 형태를 보면 거의 대형 건설사들이 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통계를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걸 사면 쪽으로 해서 풀어 가지고 사실 그걸 악용을 좀 한 게 있는데 이게 삼진아웃제 사례를 들면 현대건설이 걸려 갖고 자른다고 되면 이게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뭐 해외 건설의 날도 제정한다고 했는데 해외 건설 수주하는 데도 회사가 없어지니까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사형시킨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도라든가 상해치사라든가 3회, 5회 이상 하면 사형시킨다는 그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굳이 삼진아웃제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공청회라든가 토론을 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우리 박덕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자꾸 반론을 거는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하기는 한데, 정말 입찰담합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문제는, 여태까지 입찰담합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실시공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건설업체가 욕을 먹고 있고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있었습니까?

입찰담합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제재, 저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삼진아웃이 들어가면 안 해야지요, 이제. 그것 때문에 삼진아웃이 되면…… 세 번이나 입찰담합해 가지고 걸렸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돼 가지고 이것을 도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것은 입찰담합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허용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이 걸렸다, 그러면 세 번째는 정말 하지 말아야지요,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입찰담합이 여태껏 가져온, 대한민국 경제에 가져온 폐해 이걸 봤을 때 이것은 오히려 더 강화되면 강화가 필요하지 이것을 그 이후에 나타날 부작용 때문에 도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은 아까 수용이라고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이 문제도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3회 이상 담합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도덕책처럼 하면 다들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요,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아까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작동한다면 계속해서 담합이 발생하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2000년대 이후에만도 담합 관련 특별사면이 2000년, 2006년, 2015년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특별사면에 즈음해서 건설업계가 공정경쟁과 자정실천 결의대회를 통해서 결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의문 안에 ‘불공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삼진아웃제를 강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희는 특단의 대책을 받아들이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은 한 번만 위반을 해도 등록이 말소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른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보더라도 건설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건수도 많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징벌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건설업계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반복되는 불공정행위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건설적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어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건설은 꼭 그렇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불공정 담합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일종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오랜 고민 끝에 이 안을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결단을 내리셨다 이거지요?

제가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건설업자의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법인이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소위원장 민홍철 현재 동일 법인이 3회 입찰담합을 해서 과징금을 받은 그런 통계가 나오니까? 한 얼마 정도 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등록 말소를 한……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없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그러니까 한 업체가요, 일생 동안 지속하는 동안 세 번 입찰담합으로 처벌받은 법인의 수가 전체 건설업체 법인에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통계를 갖고 있나요?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데이터를 거의 확인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평생 동안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세 번 입찰담합을 해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고 볼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위원장님, 건설경제과장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됩니까?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입찰담합으로 세 번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금 100대 기업 내에 있는 대규모 업체들……

○소위원장 민홍철 그건 없을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그 업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입찰담합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이 안 될 뿐입니다,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4대강 같은 경우는 다 2009년 이럴 때 했기 때문에 이 법이 도입이 된 것은, 삼진아웃제가 도입이 된 것은 2011년 5월에 도입이 됐고 2012년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은 아무리 많이 처벌을 받아도……

○소위원장 민홍철 사면됐으니까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김현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소위원장 민홍철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2011년에 처음으로 입찰담합에 대해서 근거 규정이 들어왔잖아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삼진아웃제가 들어왔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삼진아웃제라는 게 현행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래서…… 삼진아웃 아닌데요? 3년 동안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한 번 처분을 받고 두 번 더 하면 결국 3년 내에……

○소위원장 민홍철 두 번이니까 세 번으로 늘리는 거지요.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 2011년에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규정이 없었으니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법을 하고 나서 한 5년 안에, 그 사이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한 번 정도는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극히 희박하네요.

○鄭宗燮 위원 아니, 현행법에 따라서 등록 말소된 그런 게 없잖아?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현행법에 따라서 한 번 걸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입법목적이 충분하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박덕흠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지요.

○박덕흠 위원 자꾸만 처벌, 처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쉽게 얘기해서 수

익이 안 나니까 담합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왜 그러냐면 지금 하도급 업체들도 저가입찰을 봐서……

저는 4대강 입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 담합 안 한 나머지 입찰 본 회사들은 거의 적자입니다. 적자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한 하도급 업체들이 거의 많이 손실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원가를 어떻게 제대로 줘서 일을 시킬 거냐는 것부터 논의를 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담합을 왜 하겠습니까, 담합을?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예를 들어서 이게 원가가 되면 절대로 담합을 안 해요. 원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자기들 살려고 하니까 담당자들이 실적은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요. 받는데, 불공정 입찰담합이 건설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불공정 담합이 건설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부분에 다 있고, 그래서 자동차, 항공사 유통가격 담합 이것 다 과정금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똑같이 이것을 해야지. 담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이 위원님 얘기했듯이 아주 나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실시공도 예를 들면 더 중요하지요, 담합보다도. 담합은 돈으로 손해를 보는 거지만 부실시공은 인명 피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실시공도 삼진아웃 같이 3회 이상 하면 이것도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원욱 위원 그것도 맞지요.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빨리, 급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제가 국토부한테 아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면책 조항하고 기간 제한에서 다른 법하고…… 아까 면책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11년에 도입을 해

서 그 이후에,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담합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더 강화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사면해 주면서 삼진아웃제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조금 강화를 하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막 담합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을 두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면책 조항을 조금 삽입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고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감정적인 입법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런……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감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입찰담합이라는 게 굉장히 나빠요.

○이원욱 위원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적입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쁜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다른 법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과도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냉정하게 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냥 판단할 때 2011년 이후에 그렇게 담합이 막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작년에 협의를 통해서 삼진아웃제를 강화하자고 해서 이제 한 단계 나가는 건데, 기간 제한 없고 면책 조항도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법률하고의 형평성을 조금 한번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간 제한, 저는 아까 정중섭 위원님 의견도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조사기간이 너무 길어서 기간 제한 뒀을 때 그렇게 걸릴 확률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기간 제한 없이 3회로 하는 건 저는 오케이,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면책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업계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한번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여기서 장시간 토론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입법취지는 다 동의하듯이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원가 이하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입찰담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는 우리 박덕흠 위원님 견해와는 좀 다른 견해인데요. 그것은 또 업계 나름대로 원가 절감의 방법이 있을 거고요. 입찰담합 자체는 우리가 엄연히 범죄 또는 잘못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실무자, 과장님 얘기가 이 법 시행된 이후에 거의, 1건 정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지금 제가 확인했는데요, 3건 있었고 27개 업체가 걸렸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27개요? 그러면 2만 개 업체 중에 27개면 뭐 극히……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건설업체 중에…… 6만 개 아닙니까?

○박덕흠 위원 문제는 이제 대기업……

○이원욱 위원 100대 기업이에요. 100대 기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100대 기업 중에 27개입니까?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크게 일어나는 데가 대규모, 큰 업체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두 번 걸렸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3건에 27개 업체가 걸려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게 이제 공동도급을 하니까 3건에 업체가 엮여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여기 현행법에 따라서 3년 이내……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시행 이후 지금까지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두 번 담합……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한 번 처벌받고 두 번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3년 내 세 번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현행법에 의해서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현행법이에요.

○소위원장 민홍철 아, 현행법이 지금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이 두 번 있으니까…… 세 번입니까, 현재? 3년에 세 번, 그게 지금 27개 업체라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그러니까 처벌 건은, 어떤 프로젝트는 세 가지 프로젝트가 걸렸는데 거기에 연루된 기업들이 27개가 있다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어차피 입찰담합으로 인해서 3회 처벌받은 업체가 27개라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3회는 아니고요.

○소위원장 민홍철 3회가 아니고?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예.

○이원욱 위원 한 번이라도……

○소위원장 민홍철 한 번이라도?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예.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세 번 한 업체는 극히, 거의 없네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지금은 없습니다. 있으면 당장 말소가 되겠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현희 위원 말씀대로 의사도 평생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주운전도 지금 삼진아웃하면 평생이 짱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은 입법목적이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박덕흠 위원님 양보하시지요.

○박덕흠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사실상, 아까 얘기했듯이 법에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큰 기업들이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게 잘못될 경우에는 우리 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오히려 또 이게 그러면 담합이라면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불공정 담합이 여러 가지 물품이든 자재든 다 있거든요. 이러면 전부다 삼진아웃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는 취지를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는.

○소위원장 민홍철 지금 등록 말소하는 벌칙에 뭐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후에 또 할 경우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도급 대금 체불……

○소위원장 민홍철 그 세 가지는 다 형사처벌까지 받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형사처벌 아닙니다. 등록 말소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안 받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소위원장 민홍철 과징금만, 그렇지요? 그런데 입찰담합은 형사처벌까지 받잖아요.

○박덕흠 위원 처벌, 과징금……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훨씬 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덜 중한 것도 등록말소를 하는데 훨씬 중한 것을 등록말소를 안 시킨다면 그것은 또 법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 같은데.

○鄭宗燮 위원 이게 첫째, 범죄행위잖아요?

○소위원장 민홍철 예, 범죄행위 자체.

○鄭宗燮 위원 범죄행위니까 당연히 등록말소가…… 그래야 경쟁이 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요, 형사처벌까지 받는데.

어떻습니까?

○박덕흠 위원 하여튼 조금 검토를 다시 해 보고, 업계 의견을 들어 보고 공청회라든가 해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합리적인 대안을 내실 수 있나요?

○박덕흠 위원 그것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우리 소위원회가 지금까지 전부 다 만장일치로 하는 그런 게 돼 있어서……

○박덕흠 위원 아니, 글썄 그래서 저도…… 저는 현장에 좀 있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같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오늘 다 얘기, 토론도 하셨으니까요. 아까 원자재 표시, 원산지 표시와 같은 법률, 24일 날 소위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의원입법입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정 위원님, 양해하시지요?

○鄭宗燮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왜냐하면 오늘 토론을 다 했으니까 그때 또, 그 사이에 좋은 대안이 나오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부 측 의견도 다 들었으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양해하신다면 짧게 한 말씀만……

○소위원장 민홍철 예.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걸 저희가 감정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소위원장 민홍철 물론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저가낙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입찰제도를 계속해서 지금 선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병행하고, 그래서 저희의 의도는

이런 것을 통해서 건설업체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건설업체를 무슨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제도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설 관련 제도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해외에 가서는 잘 지키는데 국내에서는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조금씩 없애가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도 그런 의지에서 표현된 것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시고 다음 소위 때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윤관석 의원님 안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 위원님.

○윤관석 위원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율이 낮아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돼서 건설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 있고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커서, 직접시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년째 시공금액 기준에 직접시공 논의가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고, 앞에도 두 분 의원님의 법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해당 협회라든지 논의를 해 나가되,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그냥, 논의가 쉽게 진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냈던 안의 핵심사항은 직접시공실적 평가를 점진적으로 항목에 넣어서 늘려 나가자, 이렇게 해서라도, 이게 금액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파급력도 좀 덜하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서 비율을 높여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안한 것인데, 이것도 지금 어렵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것은 제가 말씀을……

○윤관석 위원 부처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것은 사실은 앞에 정동영 의원님 발의하신 직접시공과 좀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행력을 담보하는 게 가장 큰 이슈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접시공실적을 어떻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측면에서 신중 검토……

○**윤관석 위원** 그러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아니요, 준비가 아니라 이게……

○**윤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면 법안 통과한 이후에 시행될 기간을 좀 뒤서 거기에 대한, 직접시공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거나 위장하는 것들은 감독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데 지금도 직접시공을 하면 계획서를 내고 나중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앞의 직접시공 문제하고……

○**윤관석 위원** 아니요, 앞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요. 앞에는 금액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또 시행령 내려가면 다 그게 또 여러 가지 예외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도 좀 담보하기가 그동안 어려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워낙 부담이나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것을 점진적으로 실적평가를 하자, 시공에 대해서. 그런데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부처가 지금 주로 반대하는 게? 그런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윤관석 위원** 평가가 왜 어려워요? 준비를 해서 하면 되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시공실적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게 서류상의 직접시공이라고 내면 세부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야 되는 서류도 많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관석 위원** 아니, 그래도 필요한 입법취지가 맞다면 그것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직접시공실적 능력을 올리고 비율을 올려 가지고, 지금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금액기준으로도 안 되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래서 하여튼 직접시공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지금 좀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윤관석 위원** 지금 이게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데,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계속 입법하지 말자, 뭐 이런 걸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애기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하여튼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윤관석 위원** 이게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업계의 입장도 좀 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우리 건설……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건설정책국장이 보충설명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계약자 공동도급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자’하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건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건설업체에서도 좀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직접시공이 처음에 착공할 때 ‘이 공사는 직접시공을 얼마큼 하겠다’고 서류상으로 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종 집계는 준공처리할 때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시공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직접 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라든지 거래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최종 집계는 준공 때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3년짜리 공사인데 1년 중간에 받으려고 해도 그 나름대로의 공정이 있습니다. 공정이 있어서 1년 시점에 당초 목표대로 공정상율이 안 되고 그것은 익년도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체크가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이러한 서류 내는 거라든지 그리고 발주처에서도 중간중간 체크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하기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사실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당장에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윤관석 위원** 그걸 행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보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그런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0억 짜리 건설공사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세금계

산서라든지 어떤 거래내역서라든지 이게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등?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첨부시켜서 체크하고, 그리고 또 발주청이, 한 사람이 사실 수십 건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기 전까지는 확인 내지 점점 이런 부분이 쉽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 말씀하셨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윤관석 위원 다른 분 얘기하고 나서.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또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직접시공 의무규정 20%, 30% 아까 정동영 위원이 얘기한 것,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가 마찬가지로잖아요, 이게 안 되면?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지금 윤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동영 의원님 그 안이 잘 안 될 때 보완책으로 이것을 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박덕흠 위원 보완책으로?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예, 그렇지요. 앞부분에 정동영 위원님이 직접시공 플러스 주계약자 공동도급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보고 논의를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처리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올린 겁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내용 보고 또 논의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건데, 그 금액기준으로 하는 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안 되고 있지 않아요, 논의만 되고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점진적 방식을 도입해 보자는 게 제 안의 핵심이고. 그런데 이 정도도 국토부에서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 하면 직접시공을 늘리는 게 어려운 거지요, 사실상.

○소위원장 민홍철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하잖아요, 그 계획서가 즉 관리가 되나요, 관리가 돼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발주처에서 갖고 있지요.

○김현아 위원 발주처에서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약간 전산화해서요, 평가

가 어렵다면 공시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필요성이 있는데 자꾸만 평가를 하려니까 보통 저희가 어려운데, 일단 공시를 해서 계획서를 받아 놓고 저희가 나중에 가서 준공 이후에, 그 실적에 대해서 잘못하면 나중에 처벌조항도 만들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행력을 담보하느냐라는 게 어렵다면 첫 단추를 하는 게 어차피 직접시공계획서를 다 제출하고 저희가 관리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저는 지금 윤 의원님이 제시하신 이 안에서 평가는 조금 미루더라도 공시만 하나 받아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그다음에 발주처 의견도 들어보고 건설업계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직접시공의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공사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처한테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법에 의해서 강제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발주자가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법정 직접시공 비율 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그럴 듯하게 서식에 맞춰서 제출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이후에 그 계획대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성 측면에서 양측이, 갑과 을이 다 이 부분을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시공을 제대로 체크하려면 그 계획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려면 하나하나 거래내역서라든가 임금지급이라든가 비용을 다, 왜냐하면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요, 그걸 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금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아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 볼게요.

그러면 국토부는 직접시공을 장려할 만한 것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세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그런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현재 범위 내에 있는 50억 미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시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현장의 집행상황이나 점검이나 이런 걸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서 발주자 교육도 시키고 제대로 된 직접시공의 효과를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예.

○**김현아 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게 지금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도 아니고 50억 미만에 대해서 시공실적을, 일단 계획서 자체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공시하자는 게 뭐가 어려울까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지금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 공사, 민간공사를 포함해서 공공공사 해서 모든 업체들이, 지금 6만 개 업체들이 이 시공실적을 받고 있는데 거기의 모든 경우의 직접 시공실적을 따로 구분해서 평가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엄청난 행정적인 업무부담이 일고요.

이것을 발주자가 확인을 해 주는데 잘못 해 주게 되면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부담 플러스 책임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법안대로 안 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0억 미만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실태조사를 하시든 적발을 하든 뭔가 집행하시려고 하는 의지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예, 그 의지를 갖고 있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오늘 결론은 안 날 것 같은데요.

직접시공 평가 공시제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정동영 의원님 안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오고 확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수로 정하든 금액으로 정하든 비율로 정하든 법제도가 있으니까요 직접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출할 수 있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정동영 의원님 안이 같이 연구가 돼 가지고 다시 수정이 됐을 때 이 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윤관석 위원님.

○**윤관석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된다고 애

기하셨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그 수정안을 내겠다고 그러시니까요.

○**윤관석 위원** 24일 날?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24일은 아니고요.

○**윤관석 위원** 특정하지 않았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예.

○**윤관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한번 언제까지 되는지 확인을 해 보되 제가……

그래요. 이것 때문에 계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24일 이전에 공시와 평가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한번 국토부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을 아니면 방법을……

지금 현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시공제도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소위 때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원욱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위원장 민홍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원욱 위원** 조금 아까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시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감리 항목에다가 포함시키면 현장에서 당연히 완벽하게 감시가 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일단 발주자에게 의무를 주면 아마 발주자가 감리한테 오더를 줘서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원장 민홍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19시22분)

○소위원장 민홍철 그리고 아까 의사일정 제13항과 관련해서 전현희 위원님께 국토부에서 아마 내용 설명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전현희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국토부에서 추가 수정안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문구가 약간 불명확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관리감독에 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수정안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규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드릴 것은 지금 내용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후 그다음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랬을 때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 선정된 이것까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정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더 승인을 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법 조항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정 부분에도 승인이 필요하고 그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둘 다 승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인을 못 받으면 선정이 취소되는 거지요.

○전현희 위원 아까 제가 정책관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법 규정 자체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정한 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인이 선정에는 걸리지가 않는 겁니다. 취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 자체가 그렇지가 않은 거지요.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위원님, 국토정

책관입니다.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법 제75조에 별도의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경쟁입찰 단계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2개가 구분돼 버리고 승인 받는 것은 후자만 받기 때문에 전자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선정한 후’ 이 용어를 ‘선정하고’라고 해서 고치면 다 승인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 우려 되시면 이 용어를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예, ‘선정하고’로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전현희 위원 그렇게 수정하면 저도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선정하고’보다도 ‘선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게 더 그전에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앞에 또 ‘경우’가 나옵니다. ‘대행하게 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 현 아	민 홍 철	박 덕 흠	윤 관 석
이 우 현	이 원 욱	전 현 희	정 동 영
정 종 섭	주 호 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 성 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수	홍
-------------	---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 1 차 관	김	경	환
주 택 토 지 실 장	박	선	호
건 설 정 책 국 장	김	형	렬
수 자 원 정 책 국 장	유	성	용
국 토 정 책 관	윤	성	원
기 술 안 전 정 책 관	정	태	화
기 획 재 정 부	최	재	영
국 토 교 통 예 산 과 장			